



주간통일정세 2010-52(2010.12.20~12.26)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5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김정일·정은 부자, 자강도 기계공장 시찰(12/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자강도의 희천연하기계종합공장을 시찰했다고 통신이 보도
 -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는 통신이 지난 16일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함께 인민군 제2670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전한 이후 닷새만임.
 -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CNC(컴퓨터수치제어)조립장, CNC가 공장, CNC공작기계 등을 둘러보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CNC화를 실현한 성과에 기초하여 보다 높은 과학기술고지를 향해 계속 돌진해야 한다”고 말함.
 - 이번 현지지도에는 김정은 외에 당 정치국 위원인 김경희(당 부장 겸직)와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겸직), 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당 비서 겸직), 국방위원회 국장인 현철해·리명수가 수행함.

- **北김정일·정은 부자, 희천발전소 건설장 시찰(12/2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현장에 가 ‘강성대국 원년’인 2012년 이전에 공사를 끝내라’고 지시했다고 통신이 보도
 - 청천강 상류에 위치한 이 발전소는 발전용량 30만kW로, 남한의 충주 수력발전소(40만kW)와 소양강수력발전소(20만kW)의 중간 규모다. 하지만 조선중앙방송은 작년 3월 희천발전소에 대해 ‘최근 20여년간(북한에서) 건설된 발전소 가운데 규모와 공사량에서 가장 방대하다’고 전한 바 있음.
 -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함께 마감단계에 들어선 희천2호발전소의 댐 건설현장을 시찰하고 “군인건설자 등 발전소 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해 2012년 전에 건설을 끝낼 수 있는 전망이 열렸다”면서 “수령님(김일성 주석) 탄생 100돐 전에 발전소 건설을 끝내기 위해 전당, 전군, 전민이 공격전을 벌려야 한다”고 말함.
 - 그는 희천청년전기연합기업소에도 들러 생산공정과 새로 만든 전기 제품을 둘러봤다고 통신은 덧붙임.



- 이번 현지지도에는 김정은 외에 당 정치국 위원인 김경희(당 부장 겸직)와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겸직), 박도춘·최룡해·태중수·김평해(당 비서 겸직), 국방위원회 국장인 현철해·리명수가 수행함.
-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 소식을 전한 것은 21일 자강도 희천연하기계공업공장 시찰 이후 하루만임.

● 北김정은 2년 전 김정일 현지지도 동행(12/23, 지지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3남 김정은이 2년 전 김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에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통신이 이날 보도
- 이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2년 전인 2008년 12월 북한의 북부 지역인 자강도 희천청년전기연합기업소에서 있었던 김 국방위원장의 현지 지도에 동행한 사실이 조선중앙통신의 사진으로 판명됨.
- 통신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지난 9월 이전의 활동사실이 북한 미디어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함.
- 이는 김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2008년 8월 직후인 11월부터 현지지도를 재개했으며, 이때부터 김정은이 후계자 수업을 시작했음을 시사한다고 통신은 보도

● 北신문, 또 '3대세습' 찬양...“백두 전통 이어져야”(12/24, 노동신문)

- 신문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 최고사령관 추대 19주년(12.24) 기념사설에서,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촉구
- 이날 이 신문은 “혁명 수뇌부 결사옹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이라면서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수령결사 옹위의 전통이 세대와 세대를 통해 영원히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북한에서 ‘백두밀림’이란 용어는 고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을 상징함. 따라서 ‘세대와 세대를 통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충성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 이 신문은 또 “전체 인민군 장병과 인민은 모든 혁명과 건설의 문제를 선군의 원칙에서 풀어나가고, 누구나 선군사상의 신봉자, 선군정치의 옹호·관철자가 되어 (김정일의) 선군영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중요한 혁명과업”이라고 강조
- 신문은 또 인민군에 대해 “정세의 요구에 맞게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여 적들의 일거일동을 주시하고,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0.001mm라도 침범하면 무자비한 섬멸적 타격을 안겨야 한다”고 말함.



● 北새해달력, 김정은 생일 ‘평일’ 표시(12/24, 연합뉴스)

- 북한의 새해 달력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유력시되는 3남 김정은의 생일이 ‘평일’로 표시된 것으로 확인
- 통신이 입수한 북한 ‘외국문출판사’ 발간 ‘주체 100년(2011년)’ 달력에는 김정은의 생일인 1월 8일(토요일)이 평일을 의미하는 검은색으로 표기돼 있음. 이날이 그의 생일임을 알리는 설명도 없어 달력만으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정도임.
- 반면 김 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은 붉은색으로 굵게 표시, 한 눈에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했다. 또 달력 상단에 “주체 31(1942). 2.16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탄생하시였다”고 설명
- 김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역시 붉은색으로 굵게 표시하고 달력 상단에 “주체1(1912). 4.1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였다”고 소개
- ‘설명절(2월 3일)’과 ‘정월 대보름(2월 17일)’ 등 명절은 물론 평일인 조선인민군 창건일(4월 25일)이나 김 주석의 어머니 강반석의 생일(4월 21일)도 달력 상단에 소개돼 있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김정은 생일과 대조를 이뤘음.
- 이 달력 걸면 상단에는 붉은색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문구가 적혀 있고 바로 밑에는 이 내용을 영문으로도 표기함.
- 이어 1월 달력 상단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영문과 함께 나란히 실림.
- 비록 달력에는 김정은 생일이 평일로 표기돼 있지만 북한 당국은 최근 들어 이날이 그의 생일임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생일 축하 행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단둥(丹東)의 한 대북 소식통은 신의주 주민들을 인용, “북한 당국이 최근 들어 1월 8일이 김정은의 생일임을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이날 지역마다 대대적인 축하 행사가 열릴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전함.

● 北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연회 참석(12./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군 최고사령관 추대 19주년(11.24)을 맞아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24일 공동으로 주최한 기념연회에 참석했다고 통신은 보도
- 김 위원장은 이날 “환호하는 참석자들에게 답례하면서 당의 선군혁명영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해 한몸 바쳐 투쟁하고 있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날 연회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군 총참모장 “),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최룡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당 비서 “), 국방위원회 위원들인 김정각(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주규창(당 중앙군사위 위원 “),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



장 ”), 당 중앙군사위 위원들인 김경옥(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원홍(보위사령관 ”)·김명국(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정명도(해군 사령관 ”)·김영철(군 정찰총국장 ”)·윤정린(호위사령관 ”), 국방위 국장들인 현철해·리명수가 참석했다고 통신은 전함.

- 또한 당 정치국 위원들인 김기남·최태복(당 비서 ”),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 강석주(내각 부총리 ”), 당 정치국 후보위원들인 김양건·김영일·박도춘·태종수·김평해·문경덕(당 비서 ”) 등이 초대됐다고 통신은 덧붙임.

● 北김정일-정은 부자, 음악회 관람(12./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12월 경축음악회’를 관람했다고 통신은 보도
- 이날 공연 무대에는 남성합창 ‘김정일동지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여성독창과 남성합창 ‘장군님 모시고 기어이 돌아오리’ 등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 다짐 노래들이 울랐으며, 김 위원장은 공훈국가합창단이 지난 15년간 ‘선군시대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고 이들과 기념촬영을 했다고 통신은 전함.
- 리영호(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군 총참모장 겸직), 당 정치국 위원들인 김영춘(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 김기남·최태복·홍석형(당 비서 ”),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 강석주(내각부총리 ”), 당 정치국 후보위원들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 김정각(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 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문경덕(당 비서 ”), 주규창(당 부장 ”), 우동측(당 중앙군사위 위원 ”), 당 중앙군사위 위원들인 김경옥·김원홍·김명국·정명도·리병철·김영철·윤정린,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리명수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간부들과 군 장병들이 수행

■ 김정일동향

- 12/21 김정일, 희천연하기계종합공장 현지지도(12/21, 중통·중TV·평방)
 - 김정은(黨 군사총 부위원장), 김경희(黨 부장), 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 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黨 비서), 현철해·리명수(국방총 국장) 등 동행
- 12/22 김정일, 자강도 희천청년전기연합기업소와 희천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12/22, 중통·중방)
 - 김정은(黨 중앙군사총 부위원장), 김경희(黨 부장), 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 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黨 비서), 현철해·이명수(국방총 국장) 등 동행
- 12/25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회 참석(12/25, 중통)
 - 김정은(黨 중앙군사총 부위원장),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군 총참모장 ”),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최룡해 당 중앙군사위



원회 위원(당 비서 ”), 국방위원회 위원들인 김정각(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주규창(당 중앙군사위 위원 ”),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 당 중앙군사위 위원들인 김경옥(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원홍(보위사령관 ”)·김명국(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정명도(해군사령관 ”)·김영철(군 정찰총국장 ”)·윤정린(호위사령관 ”), 국방위 국장들인 현철해·리명수

- 12/25 김정일, 공훈국가합창단의 12월 경축음악회 관람(12/25, 중통)
- 김정은(黨 중앙군사총 부위원장), 리영호(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군 총참모장 겸직), 당 정치국 위원들인 김영춘(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 김기남·최태복·홍석형(당 비서 ”),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 강석주(내각부총리 ”), 당 정치국 후보위원들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 김정각(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 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문경덕(당 비서 ”), 주규창(당 부장 ”), 우동측(당 중앙군사위 위원 ”), 당 중앙군사위 위원들인 김경옥·김원홍·김명국·정명도·리병철·김영철·윤정린,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리명수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간부들과 군장병들이 수행

■ 김정은동향

- 12/21 김정은, 김정일의 희천연하기계종합공장 현지지도 동행(12/21, 중통·중TV·평방)
- 12/22 김정은, 김정일의 자강도 희천청년전기연합기업소와 희천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12/22, 중통·중방)
- 12/25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회 참석(12/25, 중통)
- 12/25 김정은, 공훈국가합창단의 12월 경축음악회 관람(12/25, 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9월 ‘당대표자회’ 등 올해는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례 없는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난 격동적인 해”라며 이는 ‘김정일의 선군영도 결실’이라고 선전(12/20, 중통)
- 김정일이 여러 단위 현지지도를 통해 인민생활 향상, 경공업 발전, 강성대국 건설에 쌓아올린 업적 선전(12/20, 중방)
- 김정일의 현지말씀 관철 쫓기모임, 12/20 12월7일공장·선홍식료공장·향만루대중식당 등지에서 각각 진행(12/21, 중방)
- 김정일 저작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동덕 의리이다’ 발표 관련 “지난 15년간 90여개 국가와 지역에서 연구보급 사업이 벌어졌다”고 선전(12/22, 중통)



-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12.24) 19돌 즈음 청년학생들과 농업근로자들 경축모임, 12/21 최룡해(黨 비서) 등 참가하 청년중앙회관과 平南 안주시송학리에서 진행(12/21, 중통·12/22, 중방)
- 김정숙 생일 93돌 즈음 “인민군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12월에 들어와 양강도內 혁명전적지·혁명사적지 참관자 수가 연 10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선전(12/22, 중통)
- 黃南 룡연군에 새로 건설된 ‘룡연바닷가양어사업소’, ‘룡정양어장’(김정일, 11/22일 현지지도 보도)을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기여한 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 업적의 결과”로 선전(12/22, 중방)
-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19돌 즈음 직충중앙노동자예술선전대 공연과 여맹원들의 충성의 노래모임, 12/22 중앙노동자회관과 여성회관에서 진행(12/23, 중방)

나. 경제

● EU, 북한 개인·법인 제재대상 확대(12/22, 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이 북한 정권에 연루된 개인과 법인 가운데 제재 대상을 확대함.
- EU는 2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의 개인 18명, 법인 12개에 대한 비자발급 금지 및 자산동결 조치를 연장하는 동시에 개인 1명과 법인 6개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힘.
- 추가된 개인 1명과 법인 6개의 구체적인 명단은 23일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이로써 EU에 의해 비자발급 금지 및 자산동결이라는 제재를 받는 개인은 모두 19명, 법인은 18개로 늘어남.
- EU는 정확히 1년 전인 작년 12월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이자 실세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보다 강력한 제재를 단행한 바 있음.
- 이러한 대북 제재는 작년 7월 열린 EU 외무장관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 별개로 EU 차원에서 대북 제재에 나선다는 ‘공동입장’을 채택한 후속 조치임.

● 北, 수확 후 곡물 최고 30% 손실(12/2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은 운송장비와 연료 부족으로 수확한 곡물을 제때 나르지 못해 탈곡 및 저장 과정에서 최고 30% 정도의 곡물을 손해보고 있다고 RFA가 보도
- 이달 초 북한을 다녀온 식량전문가 에리히 와인가트너씨는 “트랙터 같은 중장비가 부족해 곡물을 수확해도 타작과 저장을 제때 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문제로 들쥐의 먹이가 되거나 상해서 못쓰게 되는 곡물이 전체 수확량의 20% 내지 30%에 달한다”고 RFA에 말함.



- 그는 이어 “유엔의 대북 제재로 국제사회의 지원이 급감하면서 운송 장비와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트랙터가 있어도 연료부족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올해에는 추위가 일찍 찾아와 곡물을 빨리 저장하지 않으면 내년 춘궁기 식량난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북한전문 웹사이트 ‘캔코’(Cankor)의 편집장인 와인가트너씨는 1985년부터 민간 대북 지원단체의 자문역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고, 1990년대 후반에는 세계식량계획(WFP) 요원으로 2년 반 동안 평양에 상주했다고 RFA는 설명

● 北中, 나진항 개발협약…中, 4~6호부두 50년 사용

- 중국이 북한 나진항의 4~6호 부두를 개발해 50년간 사용하고, 나진과 중국 지린성 취안허(圈河) 사이에 고속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이 북중 양국간에 체결된 것으로 전해짐.
-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조봉현 연구위원은 26일 “북한 해외투자위원회 김일영 부위원장이 어제(25일) 베이징에서 중국 지린성(吉林省) 고위관리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김일영은 나진·선봉 개발을 위해 신설한 노동당 산하 ‘나선담당국’의 국장을 겸임하고 있다”고 말함.

■ 기타 (대내 경제)

- 올해 평양시, 자강도, 黃北, 平南 등 전국적으로 “현대적인 살림집 건설성과” 자랑(12/20, 중통)
- 철갑상어의 “대량양어, 바다양식 대성공” 소개·선전과 이는 “세계를 향해 비약하는 조선의 모습”으로 김정일의 “바다양어에 대한 통 큰 작전의 화폭”이라고 찬양(12/23, 중방)

다. 군사

● 북, 타격목표 교란용 ‘모의포’ 전진 배치(12/20, 연합뉴스)

- 북한군이 우리 군의 공격원점 타격목표 교란을 위해 ‘모의포’를 서해안 일부지역에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이 전진 배치한 ‘모의포’는 120mm 및 240mm 방사포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알려짐.
- 현재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 북한군은 지난달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때와 유사한 움직임이어서 해안포 포문을 열고, 방사포를 전진 배치하는 등 추가 도발이 가능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강조함.



라. 사회·문화

- **北축구대표팀, 아시안컵 앞두고 중동서 친선경기(12/21, 조선신보)**
 - 북한 축구대표팀이 내년 1월 7~29일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중동 국가들에서 친선경기를 가질 예정이라고 신보가 이날 보도
 - 신보는 “카타르의 기후조건에 적응하고 다른 나라 대표팀들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위해 조선팀(북한팀)은 이집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여러 차례 친선경기를 한다”고 말함.
 - 조동섭 책임감독이 이끄는 북한 대표팀은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에서 이라크, UAE, 이란과 D조에서 리그전을 펼침.

- **北통신, “개성 인근 고읍리서 고려초 가마터 발굴”(12/21, 조선중앙통신)**
 - 개성 인근인 황해북도 장풍군 고읍리 고토지역에서 고려초기 것으로 보이는 가마터 유적이 발굴됐다고 통신이 이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이 가마터 유적은 길이 60m, 너비 2m, 높이 1~1.5m에 평면에서 10도 정도 기울어져 있음.
 - 반타원형인 불칸(연소실)은 길이 1.9m, 너비 1.8m에 벽돌층이 30~50cm 높이로 쌓여 있고, 소성칸(가마칸) 양옆 벽체 가운데 한 돌기의 벽돌층만 남은 상태임.
 - 이 통신은 “자기를 구울 때 덧그릇으로 쓰이던 갑자와 고려자기 조각, 도자기 등이 발굴됐는데, 가마터의 위치·형태·구조, 출토 유물 등을 볼 때 고려 초기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탈북자 99.5%, “北엔 종교자유 없다”(12/22, 연합뉴스)**
 - 북한의 헌법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북한 지역에서 일반적인 종교활동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온.
 -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 김웅기)가 2007년~2010년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3천931명을 입국시점에 조사해 지난 15일 발표한 ‘2010 북한 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3천495명 중 3천479명(99.5%)가 ‘할 수 없다’고 답함.
 - 또 종교시설(교회, 성당, 절)에 합법적으로 가본 적이 있는지를 묻자 응답자 3천593명 중 25명(0.7%)만이 ‘경험이 있다’고 답해, 남한과 외국의 종교단체에게 밝힌 것과 달리 일반 주민들의 종교활동은 극히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종교자유백서’는 “북한 당국은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종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뿐 실제로는 종교 단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2000년대 이후 보고된 종교 박해 관련 사건만 해도 367건”이라고 밝힘.



- 적발 이유는 종교활동 325건(53.0%)이 가장 많았고 종교물품 소지 122건(19.9%), 종교전파 56건(9.1%), 종교인접촉 37건(6.0%) 순임.
- 한편 이 단체가 지난 8월 발간한 ‘2010 북한인권백서’는 탈북자 3천8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내용으로는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가 60.8%, 이주 및 주거권 12.4%, 생명권 11.9%, 생존권 3.9%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밝힘.
- 단체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10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향후 북한인권 변화 전망’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

● 中다론헌인회에 “탈북…도와달라” 잇단 전화(12/22, 연합뉴스)

- 연평도 포격 사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최근 중국 다론헌(大連)한인회에 탈북자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잇달아 걸려옴.
- 다론헌인회 관계자는 이날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4차례 전화가 걸려와 ‘일가족을 포함해 30-40명이 넘어왔는데 도와달라. 한국 정부와 연락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힘.
- 이 관계자는 “4차례 모두 밤 10시 이후에 공중전화를 이용했으며 불안한 듯 목소리가 떨리고 다급하게 느껴졌다”고 말함.
- 그는 “처음 걸려온 전화는 50대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고 그다음에는 30-40대 여성인 것으로 추정되는 등 4차례 모두 전화 목소리가 달랐지만 매번 30명 혹은 40명이 함께 넘어왔다고 밝혔다”면서 “이들이 같은 일행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함.
- 그러면서 “민감한 시기이고 공안에 체포될 수도 있어 (이들과의) 접촉이 쉽지 않다”고 덧붙임.
- 또 다른 다론헌인회 관계자는 “탈북자들이 급증했던 2005년 한인회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금전을 요구했던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그 이후 탈북자라며 연락이 온 건 처음”이라며 “탈북자들은 1-2명, 많아 야 일가족 4-5명이 함께 움직이는 데 만약 30-40명이 동반 탈북했다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함.
- 주선양한국총영사관도 이런 동향을 파악, 경위를 조사 중임.

● 北, 뇌물도 中위안, 美달러로 준다(12/22, 좋은벗들)

- 북한에서 시장 거래뿐 아니라 뇌물로도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화가 북한의 원화보다 선호될 정도로 외화 사용이 일반화됐다고 ‘좋은벗들’이 이날 전함.
- 이 단체는 소식지에서 북한 현지 소식통을 인용, “청진 수납시장, 함흥 추평시장, 신의주 채하시장, 혜산 신흥시장 등 주요 시장에서 웬만한 상품은 인민폐나 달러화로 거래하고 있다”면서 “소소한 물건값은 북한 돈으로 매길 때도 있지만 북한 돈으로 10만원 이상인 물건값은 인민폐나 달러로 받는다”고 밝힘.



- 단체에 따르면 시장 소매상도 물건값을 물어보면 달러나 위안화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져, 쌀 한 포대가 얼마냐고 물으면 보통 위안화로 계산해 '100원'이라고 말하고 있음.
 - 실제로 지난 11월 말 량강도 혜산 신흥시장에서는 모처럼 장을 보러 나온 농장원이 쌀 1포대에 '100원'이라는 말을 인민폐가 아닌 북한 돈 100원으로 잘못 알아듣고 쌀 7포대 값을 북한 돈 700원으로 건넸다가 장사꾼에게 '무식하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한바탕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단체는 밝힘.
 - 단체는 “각 시, 군에서 운영하는 국영상점이나 수매상점에서도 북한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 분위기”라면서 “이전에 외화상점에서만 달러나 인민폐로 계산하던 것이 이제는 전체 상점으로 확대된 양상으로, 주민들 사이에서도 텔레비전, 녹화기(VCR 등), 자전거, 세탁기 등을 사려면 달러나 인민폐를 들고 가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고 전함.
 - 단체는 이어 “북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주민들을 통제, 단속하는 보안 기관원도 뇌물을 받을 때 북한 돈은 반가워하지 않는다”면서 “기관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달러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인민폐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보안 기관원들이 6개월 노동단련형을 받은 사람들에게 1개월당 인민폐 100원씩 받고 풀어준 경우도 있다”고 말함.
- **北, 연평도포격 이후 탈북자가족 통제 강화(12/23, 자유아시아방송(RFA))**
- 연평도포격 이후 북한 당국이 탈북을 차단하기 위해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했다고 RFA가 이날 전함.
 - 탈북자 박정철(32.가명)씨는 RFA에 “최근 함경북도 회령시 국경 지역에 사는 가족들이 보위부에 소환됐는데, 남한의 내 주소까지 다 알고 있으니 통화하거나 탈북할 생각을 말라는 협박을 당했다”면서 “보위부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주소까지 다 알고 있다는 말에 며칠 밤잠을 설쳤다”고 말함.
 - 박씨는 이어 “회령시에서만 수십 세대의 탈북자 가족들이 보위부에 불려가 비슷한 내용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고 덧붙임.
 - 부산에 사는 탈북자 김선옥(28.가명)씨도 “얼마 전 북한 내 가족들로부터, 보위부에서 언제 나와 통화하고 송금받았는지 조사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털어놓으면 용서한다는 말에 속아 사실대로 말한 탈북자 가족들은 보위부 예심과로 끌려가 문초를 받았다고 한다”고 전함.
 - RFA는 “탈북자 가족들을 협박하는 것은 이들이 남한의 탈북자들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가 새나가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연평도 포격 이후 장마당 쌀값이 1kg에 1천800원을 웃도는 등 생활고



가 심해져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이 늘어났을 수도 있다”고 지적함.

● **사격훈련 날 평양대학가에 ‘미군폭격’ 소문(12/24, 자유아시아방송(RFA))**

- 남측군이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을 벌인 지난 20일 북한의 대학생들 사이에 ‘미군이 평양을 폭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대피 소동이 벌어졌다고 RFA가 이날 전함.
- RFA에 따르면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대학생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정치경제학부, 혁명역사학부 등에 다니는 고위층 자녀 상당수가 (연평도) 사격훈련 당일 학교에 나오지 않아 출석률이 30% 넘게 떨어졌다”면서 “당국이 ‘미국 폭격’ 소문을 퍼뜨린 학생을 찾고 있다는 말을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니는 친구한테 들었다”고 말함.
- 김일성대의 경우 사격훈련 당일 등교한 학생들도 오후에는 교정을 빠져나와 인근의 지하철 삼흥역 주변으로 몰렸고, 한때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가 평양 상공에 떠 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고 이 대학생은 덧붙임.
-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한 대학교수는 “연평도 사건으로 (북한군의) 분대장 2명을 포함한 군인 7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다는 소문이 대학생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면서 “이런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국이) 황해남도 주민들의 타지 이동과 전화통화를 금지했다”고 말함.

● **히로뽕 흡입 北주민 동영상 ‘충격’(12/24, NK지식연대)**

- 히로뽕을 흡입하는 북한 주민의 동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음.
- 이 단체가 북한 주민으로부터 확보해 공개한 동영상으로는 가정집으로 보이는 곳에서 성인 남녀 2명이 히로뽕으로 추정되는 하얀 물질을 불에 태우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장면이 나옴.
- 단체는 동영상이 촬영된 곳이 양강도 혜산시이고, 한 북한 주민이 현장에 동석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이 단체의 통신원을 통해 전해왔다고 밝힘.
- 동영상 속 주민들은 작은 비닐봉지에 든 히로뽕 추정 물질을 은박지에 바른 뒤 작은 알콜 램프로 은박지 아래쪽을 태워 발생하는 연기를 얇은 관으로 들이마셨음.
- 주민들은 가위와 은박지, 유리관 등을 바닥에 늘어놓고 히로뽕 흡입을 준비하면서 “(마약을) 없어서 못 산다”, “청진, 평성에서는 처녀들도 막...”이라고 말해 북한에서 히로뽕 흡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과학백과사전출판사, 圖書 ‘세계유래상식사전’ 출판(12/20, 중통)
- 조선중앙사진선전사, 평양의 불장식(‘네온 싸인’)을 수록한 사진편집물(70여점) ‘아름다운 평양의 밤’ 발간(12/21, 중통)
- 평양시내 일꾼들의 대동강과 보통강반을 문화휴식터로 전변시키는 등 전국 각지에서 강하천 면모 일신 투쟁성과 보도(12/22, 중방)

2. 대외정세

가. 일반

- 박덕훈 北UN대사, “외교적으로 안되면 軍 나서”(12/20, 연합뉴스)
 - 박덕훈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는 19일(현지시간)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와 관련, “외교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군이 나설 것”이라면서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함.
 - 박 차석대사는 이날 회의 중간 휴식시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리에서 우리(북)는 우리(북)의 주장을, 남측은 남측의 주장을 폈다. 우리 외교관들이 할 것은 이제 다했다”면서 이같이 밝힘.
 - 박 차석대사는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 “남측이 먼저 우리 북한 영해에 수십발의 포탄을 쏜 것 아니냐”면서 “연평도 포격은 자위적 조치였다”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함.
 - 이어 “남측이 연평도 포 사격을 강행할 경우 우리도 영해를 고수하기 위해 자위적 타격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함.
 - 박 차석대사는 남측이 주장하는 전투기 타격 등은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며 북방한계선(NLL)을 고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함.
 - 또 “이번 사태는 남북한 간에 논의할 문제이지 국제평화와 안보위협을 다루는 안보리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도 거듭 밝힘.
 - 한편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으로서는 안보리 상황과 관련해 어떤 말도 하기 어렵다”고 말함.
 - 이 관계자는 “안보리 상황에 대한 책임있는 코멘트를 얻고 싶다”는 요구에 “바쁘다. 다음에 다시 통화하자”고만 말하며 전화를 끊음.
- 北신문, 일본 ‘신(新)방위계획대강’ 비난(12/21, 노동신문)
 - 북한이 이날 일본 정부의 ‘신방위계획대강’에 대해 “우리나라와 중국을 겨냥한 재침 군사작전을 합법화하기 위한 전쟁문서”라고 비난
 - 신문은 이날 ‘위험천만한 재침군사작전의 도약대’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일본의 새 방위계획대강은 그 내용, 성격, 목적에 있



- 어 극히 위험한 문서"라면서 "본질상 해외침략을 노린, 일본자위대의 공격작전능력 등을 높이기 위한 군사적 기도의 산물"이라고 주장
- 이 신문은 이어 "일본 반동들이 새 방위계획대강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위협 대처에 대해 못박았지만 일본이 그 누구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허구이며 날조"라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가 긴장되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함.
- 또 이 신문은 "유사시 일본이 자국민 구출이라는 구실 밑에 자위대 무력을 발동해 재침 야망을 실현하려 한다면 그들 자신의 파멸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 반동들의 재침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그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무자비한 불벼락을 안길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경고
-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17일 내각회의와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국가 방위 정책의 초점을 옛 소련의 냉전 위협에서 중국으로 전환하고, 북한의 핵에 대비해 미사일 방공망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신방위 계획대강을 승인함.

● 北신문, 류샤오보 노벨평화상 수상 비난(12/21, 노동신문)

- 신문은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55)가 올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것과 관련,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이 기만적인 '인권옹호'의 간판을 내들고 노벨평화상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난
- 신문은 전날 '주권침해 행위에 대한 강경대응자세'라는 글에서 "지난 10일 중국의 반정부 인물인 류효파(류샤오보)에 대한 노벨평화상 수여놀음이 벌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함.
- 이 신문은 "류효파로 말하면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기 위해 엄중한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자로 이미 중국 법에 따라 마땅한 처벌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서방세력은 그 무슨 '인권보장'을 제창하면서 류효파를 비호두둔하고 그에게 노벨평화상까지 수여하도록 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어 "중국은 류효파에 대한 노벨평화상 수여식을 강행한 서방의 처사를 자기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내정간섭 행위로 규탄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비롯한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류효파에 대한 노벨평화상 수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덧붙임.

■ 기타 (대외 일반)

- 中 외교부 대변인, 12/18 "조선반도 정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유관국들이 대화를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강조" 기자회견 소식 보도(12/21, 중방)



- 訪北 ‘빌 리처드슨’ 美 뉴멕시코주지사 일행, 12/21 귀국(12/21, 중통·평방)
- 국제사회계의 日 정부에 대한 과거보상 촉구 움직임(위안부범죄 배상 촉구 서명문 제출, 독일정부의 국가적 책임과 보상 등)을 예로 들며 “일본은 국제사회의 전례를 따라 과거청산을 위한 법적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주장(12/22, 중통·민주조선)
- 김영남, 12/21 벨라루시 대통령 再選 관련 축전 발송(12/22, 중통·중방)
- 美 합참의장의 韓·美·日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 언급 등 미국의 ‘3각 군사동맹구축’ 적극적 움직임은 “對北 군사적 위협과 東北亞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12/23, 중통·노동신문)
- ‘빌 리처드슨’ 美 뉴멕시코 주지사 訪北기간 ‘연평도 포사격훈련 再 실시’ 관련 ‘오바마’ 정부는 “北의 2-3차 대응타격(北 최고사령부 보도)을 피하려면 일시적 방편이 아닌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代辯(12/23, 조선신보)

나. 6자회담(북핵)

● 北, IAEA 사찰단 영변 핵시설 복귀허용(12/20, CNN)

- 북한이 유엔 핵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하고 핵 연료봉을 외국으로 반출하는데 합의했다고 CNN방송이 보도
- 리처드슨 주지사를 동행 취재하고 있는 CNN의 울프 블리처 앵커는 “북한이 추방했던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단이 영변 핵시설에 복귀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함.
- 북한은 또 우라늄 농축을 위한 핵 연료봉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1만2천개의 미사용 연료봉의 판매를 협의하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블리처 앵커는 전함.
- 방송은 북한이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분쟁지역 감시를 위한)군사위원회와 남북간 군사핫라인 구축에 대해 고려하는 것에도 동의했다고 전함.
- 리처드슨 주지사는 이번 방북에서 한국의 연평도 해상 사격 훈련과 관련, 북한에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함.
- 지난 16일 베이징을 통해 방북한 리처드슨 주지사는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비롯해 리용호 외무성 부상, 비무장지대 주변 병력을 관장하는 박림수 국방위원회 정책국장 등 외무성과 군부의 주요 인사를 만나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박림수 국장은 리처드슨 주지사에게 “북한이 6.25 전쟁 당시 숨진 미군 병사 수백 명의 유해를 발견했다”면서 이들 유해의 미국 송환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북·미 직접 대화에 강한 의지를 보임.



3. 대남정세

- **北매체, 사격훈련 직전 또 ‘북방한계선’ 비난(12/20, 우리민족끼리)**
 -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이날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 직전 북방한계선(NLL)을 또 비난하고 나섬.
 - 이 매체는 ‘보수매문지의 얼토당토 않은 궤변’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사격훈련의 정당성을 강조한 18일자 모 신문사설 내용을 거론한 뒤 “남조선 괴뢰들이 떠드는 ‘북방한계선’은 쌍방 아무런 합의 없이 생겨난 것으로 ‘정전협정’은 물론 ‘해양법협약’과 괴뢰들 자신의 ‘해양법’에도 어긋나는 유령계선”이라고 주장
 - 이 매체는 또 “복잡한 수역의 경계선은 쌍방 원칙적 합의를 거쳐 공정히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보편적 요구”라면서 “일방이 제멋대로 경계선을 설정한다면 쌍방 충돌의 불씨가 될 것이고, 특히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조선 서해에서의 해상분계선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고 강변

- **北, 연평도 훈련에 “대응 가치 느끼지 않아”(12/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이날 오후 실시된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과 관련,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혀 당장 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함.
 - 통신에 따르면 북한인민군은 이날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우리 혁명 무력은 앞에서 얻어맞고 뒤에서 분풀이하는 식의 비열한 군사적 도발에 일일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힘.
 - 이 보도는 그러나 “한계 없는 우리 혁명무력의 2차, 3차 강위력한(강력한) 대응타격이 미국과 남조선 괴뢰호전광들의 본거지를 청산하는 데로 이어질 것”이라며 종전의 공격 위협을 늦추지 않음.
 - 이 보도는 오후 4시4분 우리 군의 해상사격훈련이 완전히 종료된 지 2시간 30여 분만에 나온 북한 측의 첫 반응임.
 - 이어 “우리 군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 괴뢰군부 호전광들은 지난 연평도 포격전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는 대신 20일 14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연평도 일대에서 수천발의 총포탄을 발사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이는) 우리의 군사적대응을 유도해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파산에 직면한 대아시아 정책과 대조선 전략을 수습해보려는 음모의 산물”이라고 주장함.
 - 이 보도는 또 국군의 이날 해상사격훈련에 대해 “우리(북한) 군대의 자위적인 2차, 3차 대응타격이 두려워, 계획했던 사격수역과 탄착점까지 변경시키고 11월 23일 군사적 도발 때 쓰다남은 포탄을 날린 비겁쟁이들의 불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세계는 조선반도에서 누가 진정한 평화의 수호자이고, 누가 진짜 전쟁도발자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변함.



- 北신문, “전광판 심리전, 새 무장충돌 위험”(12/20, 노동신문)
 -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의 등탑 점등식을 하루 앞둔 가운데 신문은 이날 “대형전광판에 의한 심리모략전이 새로운 무장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망동”이라고 밝힘.
 - 이 신문은 ‘호전세력의 군사적 도발책동을 강력히 규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괴뢰 군부가 전선서부의 최전연지대에서 ‘대북심리전’을 위한 등탑켜기 놀음을 벌인 것은 군사분계선 일대에 설치된 대형전광판에 의한 반공화국 심리모략전의 개시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면서 이같이 주장
 - 신문은 “북남 사이에 첨예한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속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도발 소동도 무력충돌과 전면전쟁의 발화점으로 될 수 있다”고 덧붙임.
 -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올해 5월 24일 ‘남조선의 역적패당에게 보내는 공개경고장’을 통해 “(남한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하면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조건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음.
 - 한편 군 당국은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애기봉’ 등탑에 전구를 설치해 성탄 트리를 만들고 점등식을 하겠다고 뜻을 밝혀와 이를 2003년 이후 7년 만에 허용기로 했음.

- 北, 핵공격 위협…“핵억제력 성전 준비 갖춰”(12/23,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터지면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함.
 - 방송에 따르면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이날 “우리 혁명무력은 필요한 임의의 시각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성전을 개시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서 “미제와 추종세력들이 전면전쟁에 불을 단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침략자들과 그 본거지를 소탕해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고 밝힘.
 - 김영춘의 이 같은 발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9주년(12월24일)을 기념해 이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의 보고를 통해 나옴.
 - 김영춘은 또 “남조선 괴뢰들이 조선 서해에서 침략전쟁 연습을 벌여 놓고 우리를 반대하는 포사격을 연이어 가하는 군사적 도발을 강행한 것은, 제2의 조선전쟁 발발을 노린 적들의 침략계획이 실천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면서 “적들이 우리 조국의 하늘, 땅, 바다를 0.001mm라도 침범하면 우리 인민군대는 주저없이 강력한 물리적 타격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겁박함.
 - 그는 이어 “최근 우리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절감하면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업을 백두산 혈통으로 끝까지 완성해나갈 확고한 신념에 차 있다”면서 “강성대국 건설의 현장마다 기념비적 창조물을 세우고 혁명적 군인정신,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으로 생산적 양양을 일으켜



대고조 진군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함.

- 이날 보고대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음.
- 대신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직)·최영림(내각 총리 겸직)·리영호(인민군 총참모장·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직)과 당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최태복·김국태(당 비서 겸직), 강석주(내각 부총리 겸직), 리용무(국방위 부위원장 겸직), 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양건·문경덕(당 비서 겸직), 김정각(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겸직) 등이 주석단에 올랐다고 방송은 전함.

● 北인민군 병사들, 방송에 나와 ‘연평도 포격’ 증언(12/24,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 TV가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9주년을 맞아 준비한 ‘방송모임’(일종의 좌담회 추정)에서, 지난달 23일 연평도 공격에 참가한 것이 확실시되는 북한 군인 4명의 생생한 ‘포격 순간’ 증언이 쏟아져 나옴.
- TV의 이날 좌담회에서 사관(하사관) 김문철은 “우리 영해에 놈들의 포탄이 떨어진 것을 본 우리들의 눈에서 불이 펄펄 일었고, 구렁이 떨어지자 무자비한 복수의 불벼락을 퍼부었다”고 밝힘.
- 다른 사관 김철남은 “그때 정말 굉장했다”면서 “우리가 쏜 첫 포탄에 적 탐지기 초소가 날아가고, 적 포진지가 박살 나고, 여기저기서 연방 불기둥이 치솟는 것을 본 우리는 만세를 부르며 승리를 축하했다”고 열띤 음성으로 말함.
- 군관(장교) 김경수는 “그때 우리는 선불질을 하는 적들을 모조리 불살라 잿가루로 만든다는 멸적의 투지로 무자비한 불벼락을 퍼부었다”면서 “친다면 치는 우리의 선언이 결코 빈말이 아니고, 우리의 타격에 티끌만한 자비심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줬다”고 포격 상황을 전함.
- 그는 또 “거듭된 경고에도 적들은 우리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일삼았다”면서 “적들의 도발책동에 맞서 고도의 격동상태에 있던 우리 부대 군인들은 최고사령관 동지(김정일)를 위해 한목숨 바쳐 싸우자, 적들에게 무자비한 죽음을 주자고 외쳤다”고 덧붙임.
- 이날 모임에 참석한 다른 부대의 군관 박태군은 “만약 적들이 북침 도화선에 전쟁의 불을 달면 예측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자비한 보복타격으로 적의 아성을 잿가루로 만들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면서 “적들은 우리 군대의 포문이 아직 열린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선동
- 이들 병사는 증언에 이어 이날 모임에 참석한 다른 부대 군인들과 함께 김정일 위원장 찬양가인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합창함.



- TV가 ‘방송모임’을 전하기 앞서 북한 주민들이 주로 듣는 조선중앙방송도 같은 내용을 라디오를 통해 방송함.
- **北, 6.25남북 진상규명에 “이산가족 장애될 것”(12/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은 24일 6.25전쟁 남북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활동이 시작된 것과 관련, “최근 괴뢰패당이 ‘전시남북 진상해명’이란 것을 들고 나와 반공화국 모략소동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그런 너절한 놀음은 흠어진 가족, 친척(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장애만 조성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힘.
 - 통신에 따르면 민화협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공화국 품으로 의거입북한 인사들까지 ‘전시남북자’란 감투를 씌워 모략대결 책동에 악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또 하나의 악랄한 정치적 도발이며 용납 못할 대결 망동”이라고 주장
 -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6.25전쟁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감. 이 위원회는 내년 1월 3일부터 3년 동안 16개 시·도의 실무위원회와 228개 시·군·구를 통해 피해 신고를 받음.
- **北신문, 李대통령 최전방부대 시찰 비난(12/25,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동부 전선 최전방 군부대를 시찰한 데 대해 “그 누구의 ‘도발’설을 부각시켜 조선반도 정세를 대결과 전쟁으로 계속 몰아가려는 극히 무분별한 망동”이라고 비난했다고 통신은 전함.
 -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23일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육군 제21보병사단을 방문해 ‘북한 기습공격시 대비력을 가할 것’과 ‘강력한 대응’을 강조한 사실을 거론, “대결 전쟁선동”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비난
 - 신문은 또 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국민이 다 굶어죽게 생겼는데, 원자탄 만들 돈이면 국민을 모두 먹고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우리의 사회주의 정권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악담까지 늘어놓았다”고 발끈함.

■ 기타 (대남)

- 北, 韓·美 FTA 재협상 타결, 실업문제, 교육비 등 사회적 문제 거론, “보수당국의 반인민적 악정의 결과”라며 反정부투쟁 持續 선동 (12/20, 평방)
- ‘제27차 韓·美 안보정책구상회의’ 관련 “동맹공조를 구걸하는 추태”로 “정세악화를 기화로 북침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한 위험천만



- 한 전쟁모의관”이라고 비난(12/21, 중통·노동신문·평방)
- 南 국방부장관의 전군지휘관회의 발언 등 우리 정부의 ‘對北 강력 응징’ 움직임 비난 및 연평도일대 포사격훈련 再실시는 “미국과 야합하여 전면적인 북침전쟁에 불을 지르려는 것”이라고 책임 傳家(12/22, 평방)
- ‘2011년 예산안 국회통과’ 관련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모습을 “민주화와 선진화를 광고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괴뢰 국회의 추악한 몰골”로 嘲笑(12/22, 평방)
- 北, 12/23 KBS방송 인용 國軍 5군단의 합동훈련 실시공표 비난(12/22, 중방)
- 올 한해 南 당국의 행적은 “남북관계 개선에 등을 돌리고 체제대결과 자유민주주의체제下 통일야망, 북침전쟁연습, 사대매국행위들로 얼룩졌다”며 우리 정부의 對北정책과 ‘남북관계분야’ 批評(12/23, 노동신문)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中 “北 평화적 핵이용은 비핵화 전제하에서 가능”(12/24)

- 중국이 24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은 비핵화와 관련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며 “중국과 한국의 입장에 차이가 없다”고 우리 정부에 밝혀왔음.
- 중국 정부는 이날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설명해왔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중국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지난 21일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와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발언, 논란을 일으킨데 대한 해명 차원으로 풀이됨.
- 정부 당국자는 “중국측은 장 대변인의 발언이 마치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옹호하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는데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한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입장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중국측이 밝힌 ‘관련 국제규범’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협정 등 국제 비핵화 체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보고 있음.

● “리처드슨, 北 핵의지 전달 혼선”(12/23)

- 미국의 대북 메신저 격인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16~21일 방북을 통해 핵 연료봉과 관련된 북한의 의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23일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리처드슨 주지사가 ‘사용후 핵연료봉(spent fuel rods)’과 ‘미 사용 핵연료봉(fresh fuel rod)’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해 말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실제 리처드슨 주지사는 21일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남·북·미 서해분쟁감시 군사위원회 설치와 남북 군사 핫라인 설치에 동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복구에 합의했으며 1만2천개의 ‘사용 후 핵연료봉’을 남한에 판매, 반출하는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러나 리처드슨 주지사와 동행했던 CNN은 이보다 하루 앞선 20일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위한 핵연료봉(fuel rod for uranium enrichment)



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미사용 핵연료봉’의 남한 판매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음.

- 이와 관련해 베이징의 핵 전문가들은 우선 사용후 핵연료봉은 플루토늄 추출 직전 단계로 북한이 이를 한국·미국·일본 등의 원자력 강국에 판매하면 해당 사용후 핵연료봉 분석을 통해 북한의 핵 능력을 고스란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를 절대 팔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이들은 아울러 북한은 보유했던 사용후 핵연료봉을 대부분 플루토늄으로 재처리했을 것으로 추정돼 북한이 팔겠다고 언급한 문제의 핵연료봉은 미사용 핵연료봉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음.
- 실제 북한은 천연상태의 우라늄을 채취해 가공처리 과정을 거쳐 미사용 핵연료봉으로 만들고 이를 연소시켜 사용후 핵연료봉으로 전환해 다시 재처리 과정을 통해 무기급 플루토늄을 만들고 있다. 북한은 미사용 핵연료봉 1만2천개의 판매를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왔음.
- 이런 미사용 핵연료봉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연료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애초 북한의 미사용 핵연료봉의 구입문제를 차기 6자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 시세로 1천400만달러 상당인 1만2천개의 미사용 핵연료봉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불러 실제 매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베이징의 다른 소식통은 “리처드슨 주지사는 북한이 판매하려는 게 사용후 핵연료봉이 아닌 미사용 핵연료봉이라고 했어야 맞을 것 같다”고 전했다.
- 이런 가운데 CNN이 보도한 “우라늄 농축을 위한 핵연료봉(fuel rod for uranium enrichment)의 외국 반출” 언급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미사용 핵연료봉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의 우라늄 농축 작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라늄 농축을 위한 핵연료봉은 존재하지 않으며 CNN의 보도과정에서 뭔가 ‘착오’가 생긴 것이라는 지적임.
- 아울러 북한이 판매하려는 미사용 핵연료봉은 이미 가공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천연우라늄의 99%는 핵분열 물질이 아닌 U-238인 반면 핵분열 물질인 U-235는 0.7%에 불과하며 이를 원심분리기에 넣어 농축작업을 거치면 U-235의 농도가 3~5%인 원전가동 핵연료로, 또는 그 농도가 90% 이상인 핵무기급 농축 우라늄도 만들 수 있음. 이 때문에 이란 사례처럼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통한 핵 연료 생산의 경우 핵무기 생산 의혹을 사는 게 다반사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리처드슨 주지사는 방북 전에 북한에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 시설 방문을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방문 여부는 확인되지 않



고 있음.

● 美 “원자력이용 논의보다 北의무준수 먼저”(12/23)

- 미국은 22일 북한의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 권리 주장에 대해 북한의 국제의무 준수가 앞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레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사하에 핵이용 권리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은 지금 그들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음. 크롤리 차관보는 “국가들은 권리와 함께 책임들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은 지금 자신들의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음.
- 그는 “북한이 자신들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스스로 한 약속을 따르며, 그런 맥락에서 국제사찰단을 받아들인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최선으로 충족시킬지 북한과 논의하는데 열려있을 것”이라면서 “민간 원자력도 이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경우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음.
- 그는 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비공식 대화채널인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이 북한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음을 시사했음. 크롤리 차관보는 북미 양측이 뉴욕채널을 다시 가동하고 있다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우리는 필요가 있을 때 북한과 대화할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 “엄중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communicate)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음.
- 그는 언제 뉴욕채널을 통한 접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연평도) 포격 이후 최근 수주 내에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이 북미 직접대화를 6자회담보다 선호한다는 지적에 “6자회담은 가치가 있으며, 그 틀 안에서 의미있는 양자대화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음.
- 그는 “우리는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올바른 환경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6자회담의 맥락에서든 양자대화의 맥락에서든 북한과의 추가 대화를 검토하기 전에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음.
- 한편 그는 북한 방문을 마친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로부터 성탄절과 연말 휴가기간이 끝난 뒤 방북 결과 보고를 받을 것임을 시사했음. 그는 또 한국군의 합동화력 훈련에 대해 “북한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기를 기대했음.

● 당국자 “北 NPT복귀, 협상 전제조건 아니다”(12/22)

- 정부 고위당국자는 22일 북핵 6자회담의 재개조건과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복귀가 협상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NPT



북귀를 통해 핵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나중에 긴 협상을 거쳐 NPT로 가는데 협상 전에 하는 얘기는 크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키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이어 “다만 북한이 내일 NPT에 복귀한다고 해도 받아줄 수 없다”며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NPT에 들어가려면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은 ‘투트랙’ 접근이고 대화를 통한 옵션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대화가 협박이나 시간 끌기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게 하려고 생산적인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전날 9.19 공동성명에 따라 북한이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9.19 공동성명이 만들어진 뒤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핵실험으로 궁극적인 변화가 생겼다”며 “핵실험, NPT 탈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면 우리는 평화적 핵이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9.19 공동성명을 만들 때 우리측 의도에는 우라늄농축 프로그램도 포함된다”며 “북한의 우라늄농축 및 핵활동은 북한이 뭐라고 설명해도 9.19 공동성명과 관련 안보리 결의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음.
- 그는 향후 한반도 정세를 언급, “연평도 포격은 일단 한 단락 지나갔다고 볼 수 있다. 우라늄농축 문제는 계속되는 현안이지만 연평도 사태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백악관 “회담만을 위한 6자회담 안해”(12/22)

- 미국 백악관은 21일 북한의 ‘유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개최 전 북한의 비핵화 의무 준수와 호전적 행동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음.
-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6자회담은 북한이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브스 대변인은 “우리는 6자회담을 가졌다는 좋은 기분만을 주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 6자회담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그들의 의무 준수에 진지해진다면 그때 우리는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백악관의 이런 입장은 북한이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영변 복귀에 합의하고 사용후 연료봉 1만2천개의 반출 방침을 시사하는 등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구체적 핵활동 중단 등이 없는 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당장 대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됨.

- 기브스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수주동안 보여준 호전적 행동들은 북한이 책임있는 방식으로 6자회담을 재개할 약간의 준비라도 돼 있다는 확신을 누구에게도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음.
- 그는 “북한이 준비되면, 그 때 세계는 필요한 것을 할 준비를 갖추겠”이라면서 “지금은 (북한의) 행동이 말이 아닌 행위들에 의해 나와야 한다”고 북한의 행동 변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서 “우리가 관심있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그런 의무를 그들이 준수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거듭 “북한은 자신들의 의무 준수를 위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일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세계는 북한이 그렇게 하는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기브스 대변인은 또 한국은 가장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 중 하나라면서 “우리는 한국의 행동들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북한의 호전적 행동들에 대처하기 위해 손을 잡고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북한을 방문하고 귀국길에 오른 리처드슨 주지사는 사적인 여행을 한 것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리처드슨 주지사가 만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와의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일부 공화당 의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자신이 지난 며칠간 러시아와 북한의 호전적 행동에 대한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고 언급, 미-러 정상간에 북한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했음.

● <당국자 “北 핵이용 권리주장은 어불성설”>(12/21)

- 정부 당국자는 21일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와 9.19 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음.
- 이 당국자는 “9.19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의무를 다하고 난 뒤 핵에너지의 평화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돼 있다”며 “중국의 주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지만 9.19 공동성명의 전제조건 및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을 논의하는 데 동의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는 특히 “세계에서 NPT 밖에서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인도와 파키스탄이 NPT 체제 밖의 사실상



핵보유국이지만 IAEA의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음. 인도의 경우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해 핵물질 통제를 위한 국가간 협의체인 핵공급그룹(NSG)의 예외로서 국제적 핵협력력을 할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소개했음.

- 그는 이어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살펴봐도 한국과 북한이 우라늄농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만큼 북한이 핵연료를 스스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북한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준수하고 NPT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음.

● 中 “北, IAEA 감시하 핵이용 권리있어”(12/21)

- 중국 정부는 21일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와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을 통해 북한이 IAEA 복귀 의지를 밝힌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음.
- 장 대변인은 그러면서 리처드슨 주지사의 방북과 관련, “중국은 미국과 북한 간 접촉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며 “그런 접촉이 북핵 6자 회담은 물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그는 이어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중국은 유관 각 측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면서 책임있는 태도로 불행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또 “중국은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돌아가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각 측이 9.19 공동성명 정신을 실천하고 각 측의 관심사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 대변인은 그러나 중국 측이 리처드슨 주지사와 접촉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계획은 없다”고 말했음.
- 앞서 리처드슨 주지사는 이날 평양을 출발, 베이징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에 합의했으며 1만2천개의 사용 후 핵연료봉(spent fuel rods)을 남한에 판매해 반출하는 것과 관련한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음.
- 리처드슨 주지사는 그러면서 “북한은 IAEA 사찰단을 통해 자신들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우라늄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며 사찰단 복귀 절차 등은 앞으로 6자회담국 사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北, IAEA 사찰단 핵시설 복귀허용”(12/20)

- 북한이 유엔 핵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하고 핵 연료봉을 외국으로 반출하는데 합의했다고 CNN방송이 20일 보도했음. CNN은 북한 관



리들이 방북한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와 잇따라 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패키지 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 리처드슨 주지사를 동행 취재하고 있는 CNN의 울프 블리처 앵커는 “북한이 추방했던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단이 영변 핵시설에 복귀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우리나라 농축을 위한 핵 연료봉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1만2천개의 미사용 연료봉의 판매를 협의하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블리처 앵커는 전했다. 그는 핵 연료봉을 인수하는 나라는 남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규모의 연료봉은 6개에서 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규모라고 CNN은 전했다.
- 방송은 북한이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분쟁지역 감시를 위한) 군사위원회와 남북간 군사합작구축에 대해 고려하는 것에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FP통신은 CNN을 인용 보도하면서 리처드슨 주지사가 제안한 군사위원회와 군사합작구축에 북한이 동의했다고 보도해 다소 차이를 보였다.
- CNN은 전날 리처드슨 주지사의 2가지 제안에 대해 북한이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공식적인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었다.
- 리처드슨 주지사는 한반도 긴장고조와 관련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가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끝난 데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다. 그는 유엔에서 성명이 채택됐다면 한국에 연평도 사격훈련을 취소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블리처 앵커는 전했다.
- 리처드슨 주지사는 이번 방북에서 한국의 연평도 해상 사격 훈련과 관련, 북한에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했다.
- 리처드슨 주지사는 5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늦게 베이징에 도착, 취재진에게 방북 결과를 간단히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이번 방북은 개인자격임에도 북한의 우리나라 농축 위협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김계관 부상이 직접 초청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나. 미·북 관계

● 리처드슨 “北, 논평 과격해도 실용적”(12/25)

- 최근 북한을 다녀온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는 북한 지도자들에 대해 ‘실용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정치전문 웹사이트 ‘폴리틱스 데일리’가 24일 보도했다.
- 리처드슨 주지사는 지난 23일 미국 공영라디오방송(NPR)과 한 인터뷰에서 “북한 관리들은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누그러뜨리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국영매체들의 격한 수사적 표현들이 북한 관리들의 행동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 그는 또 “늘 과격하고 전투적인 논평을 내놓는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관리들을 차별화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그들을 만나보면 ‘생각보다 실용적’(more pragmatic)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고 밝혔다.
- 리처드슨 주지사는 그러나 최근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한반도 상황을 위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 리처드슨 “美정부 요구로 訪北 2차례 연기”(12/24)

- 최근 북한을 다녀온 미국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요청으로 자신의 방북 일정을 두차례나 연기했으며, 방북이 성사된 것도 오바마 행정부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23일 밝혔다.
- 리처드슨 주지사의 이런 주장은 당초 자신이 미 정부의 승인없이 방북길에 오른 듯한 인상을 준 것은 물론, 미 국무부가 그의 방북에 대해 “순전히 개인적 차원의 방북”이라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됨.
- 리처드슨 주지사는 이날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요청으로 두번이나 방북 일정을 연기했었다”면서 “이번에 북한을 다녀올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에 대해 자신의 방북이 ‘개인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임을 강조했다.
- 그는 그러나 “내가 미 정부의 견해를 대변하지는 않지만 북한 측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 정치전문지 폴리τικο에 따르면 리처드슨 주지사의 이런 주장이 공개된 직후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이메일을 통해 “리처드슨 주지사의 방북을 승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는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앞서 리처드슨이 계획했던 여행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었으며 매번 우리의 견해가 (리처드슨에게) 알려지도록 했다”고 말해 정부가 리처드슨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 표명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 리처드슨의 대변인은 폴리τικο와의 회견에서 리처드슨 주지사가 북한 방문중에 미 국무부와 대화를 계속했으며 23일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번 방북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고 밝혔다.
- 한편 리처드슨 주지사는 CNN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남한의 군사훈련에 대해 계속 자세력을 보여준다면 미국이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6자회담 재개가 긴장고조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북미, 뉴욕채널 재가동..물밑조율”(12/22)

- 미국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중단됐던 비공식 대화채널인 ‘뉴욕채널’을 다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미 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22일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6자 회담 재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가동되던 뉴욕 채널이 중단됐었다” 며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대화채널이 가동되면서 양측이 서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이어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공조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 하면서도 한편으로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양측이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해가며 물밑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뉴욕채널은 미 국무부와 북한의 뉴욕 유엔 대표부 주재 외교관들 사이의 비공식 대화채널로,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수개월간 중단됐다가 올 가을 부터 6자회담 재개 여건조성 차원에서 다시 가동돼 왔음. 최근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도 뉴욕채널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 북·미 사이에는 6자회담 재개 조건과 일정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커 양국간 입장조율이 급진전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은 리처드슨 주지사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 ▲1만2천개의 사용 후 핵연료봉(spent fuel rods) 판매및 해외반출 ▲남북 군사 핫라인 구축 ▲남북한과 미국 3국이 참여하는 서해 분쟁지역 감시 군사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음.
- 이에 대해 미국 백악관의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은 북한이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 재개될 것”이라며 6자회담 재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음.
- 한편, 리처드슨 주지사 측 관계자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비공식 경로로 협의를 갖고 평양 방문 결과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리처드슨 “北대응안한 건 대화의지 표명”(12/21)

-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는 21일 “북한이 남한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에도 불구하고 전에 공언했던 보복공격을 하지 않은 것은 향후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 지난 16일 방북한 리처드슨 주지사는 5박6일 일정을 마치고 중국국제항공 CA122 항공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에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 오전 11시30분)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나의 방북은 한반도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것으로 북한에서 매우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만남을 마치고 돌아왔다”며 “나의 기본적인 임무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



- 으로서 진전을 이뤄냈다고 믿는다”고 자평했음.
- 리처드슨 주지사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복구에 합의했으며 1만2천개의 사용 후 핵연료봉(spent fuel rods)을 남한에 판매해 반출하는 것과 관련한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와 관련해 그는 “북한은 IAEA 사찰단을 영변으로 들여보내 자신들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목적으로 우라늄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라며 “사찰단 복귀 절차 등은 앞으로 6자회담국 사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리처드슨 주지사는 이어 북한이 남북 군사 핫라인 구축, 남북한과 미국 3국이 참여하는 서해 분쟁지역 감시 군사위원회 설치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연평도 사격훈련에 보복을 하지 않고 IAEA 사찰단 복귀를 허용한 것 등은 매우 건설적인 조치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며 “나의 느낌으로는 북한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그러면서 “북한 측에 천안함 침몰사건은 물론 민간인까지 사망한 지난달 23일의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면서 “민간인으로서의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이며 관련국들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외교적인 노력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그는 방북 기간에 초청자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리용호 외무성 부상 등의 북한측 6자회담 라인과 박림수 국방위원회 정책국장 등의 인사를 만나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음. 리처드슨 주지사는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 당국자들과 만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가 국무부에 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임.

다. 중·북 관계

● 北中, 나진항 개발협약·中, 4~6호부두 50년 사용(12/26)

- 중국이 북한 나진항의 4~6호 부두를 개발해 50년간 사용하고, 나진과 중국 지린성 취안허(圈河) 사이에 고속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이 북중 양국간에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음.
-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조봉현 연구위원은 26일 “북한 해외투자위원회 김일영 부위원장이 어제(25일) 베이징에서 중국 지린성(吉林省) 고위관리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김일영은 나진·선봉 개발을 위해 신설한 노동당 산하 ‘나선담당국’의 국장을 겸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조 연구위원은 이어 “이번 투자협약은 지난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합의된 내용”이라



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만간 평양에 중국 측 사무소를 개설하되, 투자 방식과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 그는 또 “협약 조항에 ‘북한이 유엔개발계획(UNDP)에 가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를 유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 이같은 투자가 이뤄지는 것에 대한 명분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중국은 지난 3월 나진항 1호 부두의 10년 사용권을 확보했으나 이 부두의 사용기간 연장과 다른 부두에 대한 추가 사용권을 북한 측에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북단에 위치한 나진항은 중국, 러시아 양국이 이용할 있는 부동항으로서 최적의 지경학적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돼 왔는데, 러시아는 이미 나진항 3호 부두에 대해 50년간 사용권을 갖고 있음.
- 조 연구위원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는 김정은 후계작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경제 분야 업적쌓기에 본격 착수한 것 같다”면서 “내년부터는 북중 경협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음.

● “中, 北 경제에 모종의 역할”(12/24)

- 미국 정부는 중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을 자제시키는데 개입해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가 23일 동시에 보도했음.
- WSJ는 미국 행정부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 북측이 지난 20일 한국의 포격훈련에 대해 사전의 보복 경고와 달리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면서 돌연 태도를 바꾸게 된 데는 중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미국 측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는 중국이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대북(對北) 비난을 거부해왔던 것과 사뭇 다른 분석이어서 주목됨.
- 중국은 지난 19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성명 내용에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행위에 대한 비난 문구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해 결국 성명 채택을 무산시킨 바 있음.
- 그러나 WSJ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한 관리의 발언은 중국이 지난달 북한의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를 포함해 최근 이어진 북한의 호전적 돌출행동에 대해 점점 더 당혹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동에 나설 필요성’에 대한 중국의 견해가 변해왔다고 지적했다.
-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북한에 압력을 행사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내년 1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그동안 위안화 절상 등 각종 현안으로 악화된 미-중 관계를 더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최대 지원국인 중국에 대해 북한의



호전적 행동을 자제시키는 데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기 때문이다.

- 중국 전문가나 외교관들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최근 돌출행동을 일삼는 북한을 싸고도는 것이 한국이나 일본과의 외교 관계 악화라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음.
- 설사 중국이 막후에서 북한에 대해 긴장고조 행위를 자제하도록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라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를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국 소식통들의 분석임.
- 미 행정부의 고위관리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미-중 관계의 '이슈'가 됐다는 점을 후 주석이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추가적인 공격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는 점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음.
- NYT 역시 미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북한의 대남(對南) 화해를 압박하려는 미국의 계획을 받아들였다고 미국은 북한이 호전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이번주 '중국의 압박'이 북한의 무대응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남북 양측에 대화와 접촉을 촉구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을 "정책 변화의 증거"로 꼽았음. 과거 이같은 사태가 벌어질 때 중국은 6자 긴급 회담을 제안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발언을 내놨다는 설명임.
- NYT는 이어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많은 현안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양국의) 합의는 후 주석의 방미 4주 전 베이징과 워싱턴 사이 주요 결림들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관리들은 그 결과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비치기 시작했다고 진단하기도 했음.
-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중국이 처음으로 (한반도 상황이) 제어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우려한 것이 지난주의 긍정적인 측면이었다"면서 "이에 따라 중국은 우리(미국)가 바라는 쪽으로 좀더 움직였다"고 평가했음.
- 미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후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대북 압박을 촉구한 데 이어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 대표단이 베이징을 방문한 직후, 중국이 북한의 고위 관리를 급파해 "남한 주민 공격과 살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음. 다른 관리는 나아가 중국이 남북한 화해에 적극 나서면서 북한에 대응하는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단합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음.

● “中 한반도 긴장악화 방지에 막후역할”(12/24)

- 중국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한반도 긴장상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막후역할을 했으며, 이 같은 중국의 역할 때문에



미중 외교관들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1월 19일 미국 국민방문 일정에 최종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24일 중국의 외교소식통 및 정치 분석가들을 인용해 보도했음.

- 중국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후 주석의 미국 국민방문을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요청을 받고 북한측에 대해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했으며, 평양이 극도의 자제력을 보이도록 설득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고 SCMP는 보도했음.
- 외교소식통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 주석간의 지난 12월 5일의 전화통화를 상기시킨 뒤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후 주석에게 중국의 역할을 요청하면서 그 결과가 양국간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 중국 외교소식통들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후)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편을 들고, 중국이 북한의 편을 들면서 미국과 중국관계가 악화되고, 이로 인해 이미 발표됐던 후 주석의 미국 국민방문도 위협을 받다가 일정을 확정하게 됐다고 토론했음.
- 북한은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우리나라가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을 하면 보복공격을 가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으나 지난 20일 실제 사격훈련이 이뤄진 이후에는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면서 태도를 바꾼 바 있음.
- 베이징대학 왕신성(王新生) 교수도 “중국의 강력하면서도 조용한 외교가 북한의 놀랄만한 양보를 이끌어냈음이 분명하다. 이는 중미 정상회담이라는 중요한 회담에 앞서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국의 분명한 노력이었다”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막후역할을 강조했다.
- 한편 진찬룽(金燦榮)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문제는 1월 중미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가 될 것”이라면서 “가장 긴박하고 성가신 문제에 대한 두 강대국간의 이해와 협력은 정상회담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선결조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北, 다이빙귀에 북미대화 중재 요청”(12/22)

- 북한은 이달초 방북한 다이빙귀(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미국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외교소식통이 22일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을 비난하면서도 북미관계 진전을 위해 중국이 중재역할을 해줄 것을 다이 위원에게 당부했음.
- 이에 대해 다이 위원은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초래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북미대화과 남북대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 中환구시보 “반격안한 것에 박수”..北 편들기(12/22)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북한이 남한의 연평도 사격훈련에 반격을 가하지 않은 것이 동북아 평화에 기여했다며 북한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사실을 실었음.
- 환구시보는 이날 ‘북한이 보여준 냉정을 높이 평가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20일 북한이 남한의 ‘도발’에 반격을 가하지 않음으로써 세계인에게 북한의 절제를 보여줬다”며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이미지도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이유를 막론하고 북한의 선택으로 동북아 지역 사람들이 여전히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서 북한에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음.
- 반면 남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완승을 거뒀다면서 북한을 조롱하는 여론이 있다”며 “이는 싸움을 하는 세 살 짜리 아이와 같은 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음. 그러면서 남한은 예전에는 자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항상 도발자로 규정해왔지만 이번 연평도 포격훈련을 계기로 더 이상 북한은 도발자와 동의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이번 사태만으로 성급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남한은 자신들이 도발자의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덧붙였음.
- 환구시보는 한반도 문제는 60년간 쌓여 형성된 것으로 영구적 평화를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북한과 한미일 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한편 북한과 주변국 사이의 경제 격차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실질적으로 북한의 안전감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북한이 대외 개방의 노선을 걸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만들어주면서 6자회담으로 돌아가 밑바닥에서 시작하더라도 서로의 눈을 마주보면서 난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음.

라. 일·북 관계

● 北신문, 일본 ‘신(新)방위계획대강’ 비난(12/21)

- 북한이 21일 일본 정부의 ‘신방위계획대강’에 대해 “우리나라와 중국을 겨냥한 재침 군사작전을 합법화하기 위한 전쟁문서”라고 비난했음.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협천만한 재침군사작전의 도약대’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일본의 새 방위계획대강은 그 내용, 성격, 목적에 있어 극히 위험한 문서”라면서 “본질상 해외침략을 노린, 일본자위대의 공격작전능력 등을 높이기 위한 군사적 기도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 이 신문은 이어 “일본 반동들이 새 방위계획대강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위협 대처에 대해 못박았지만 일본이 그 누구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허구이며 날조”라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



- 선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가 긴장되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중국도 마찬가지로”라고 말했다.
- 이 신문은 또 “유사시 일본이 자국민 구출이라는 구실 밑에 자위대 무력을 발동해 재침 야망을 실현하려 한다면 그들 자신의 파멸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 반동들의 재침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그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무자비한 불벼락을 안길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음.
 -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17일 내각회의와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국가방위 정책의 초점을 옛 소련의 냉전 위협에서 중국으로 전환하고, 북한의 핵에 대비해 미사일 방공망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신방위 계획대강을 승인했음.

마. 기 타

● 러시아 대사 “한반도 위기단계 지난 듯”(12/21)

- “한반도 상황이 위기 단계는 지난 것 같다.” 한국군이 20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포 사격 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북한이 대응을 자제한 것으로 볼 때 한반도 상황이 ‘위기 단계’는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중국 주재 러시아 대사 세르게이 라조프가 21일 밝혔음.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라조프 대사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통신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어제 상황의 전개로 미뤄 판단컨대 위기 단계는 점차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이것이 안심하고 상황 진전을 기다리고만 있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 외교부는 중국을 비롯한 이해당사국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사태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사는 “유감스럽게도 최근 한반도와 그 주변 상황은 얼마 전과 비교해 나쁜 쪽으로 진전됐었다”며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교환, 연평도 인근 사격 훈련 등은 상황을 극단적 수준까지 가열시켰다”고 지적했다.
- 그는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인들의 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사는 이 같은 우려 때문에 러시아는 긴장 해소와 대화, 정치-외교적 문제 해결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일련의 조치를 취했었다고 설명했다.
- 라조프 대사는 중국측이 제안한 6자회담 대표 긴급회의와 관련 “러시아는 이 방안이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건설적 대안이라 판단해 신속히 지지했다”며 “하지만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은 그렇게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와 같은 회담을 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 **日총리, 유엔 北규탄 성명채택 실패 유감(12/21)**
 -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 채택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유감을 표했음.
 - 간 총리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리가 북한을 지목해 도발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며 그러나 유엔이 이 같은 성명 채택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망스럽다고 말했음.
 - 간 총리는 또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행동에 나설 국제적 책임이 있는 국가이자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라고 언급했음.

- **러' 외무 “한반도 상황 아주 가열돼 있어”(12/20)**
 - 남북한 관계와 관련한 상황이 아주 가열돼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와 관련한 성명을 내지 못한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0일 밝혔음.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실시된 한국의 연평도 포 사격 훈련과 관련 “사격은 끝났지만 다른 정보는 없다”며 “현 상황에서 낙관주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음.
 - 그는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자제력을 보이자는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제안했던 것”이라며 “상황은 아주 가열돼 있다”고 지적했음.
 - 장관은 “유감스럽게도 유엔 안보리가 성명을 채택하지 않은 채 끝났지만 토의 과정 중에 나온 신호는 충분히 명확한 것이었다”면서 “그것은 상황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도발적 행동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보리, 한반도 긴급회의 합의 도출 무산(12/20)**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일(이하 현지시간)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어떤 합의도 이루어 내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음. 안보리는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20일 오전 1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무려 8시간 30분간의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으나, 중국이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규탄하는 내용을 성명에 포함하는데 반대하면서 점점 찾기에 실패했음.
 - 긴급회의를 요청했던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주요국들간 비공식 협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음. 이와 관련 안보리는 20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 채택에 동의하는 등 극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별 의미는 없다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임.



- 이달의 순회 안보리 의장인 수전 라이스 미국 대사도 “한반도 위기를 둘러싼 안보리 내 이견이 매우 심각하다”며 “점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해 관련 협의가 이른 시일 내에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음.
- 라이스 대사는 “회의에서 다수 이사국이 북한의 천안함 침몰 및 연평도 포격을 강하게 규탄했다”면서 “북한의 공격들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침략행위(unprovoked aggression)’”라고 비난했음.
- 당초 안보리는 러시아가 제안한 의장성명 초안을 놓고 검토작업을 벌인 결과 대다수 이사국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비난하는 내용을 성명에 담자는데 동의했지만,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를 하는 중국의 반대로 끝내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다고 안보리 관계자가 전했다.
- 러시아는 당초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남북 양측에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하고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남북에 특사를 파견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안을 제출했었음.
-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위기의 원인을 제 공한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비난하지 않는 성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영국은 ‘11월 23일 북한의 한국에 대한 공격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별도 초안을 회람해 서방국가들의 지지를 얻어냈음. 러시아는 영국의 초안에서 ‘북한’과 ‘연평도’를 빼 ‘11월 23일 포격을 규탄한다’는 수정안을 막판 회람했지만, 이마저도 중국이 거부하면서 회의는 끝내 결렬됐음.
- 박인국 대사는 “러시아가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남북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 안보리 회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의도했던 것은 이루었다고 본다”고 말했음.
- 북한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외교적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군이 나서게 될 것”이라며 과거 천안함 때의 발언을 반복했음.
- 한편 추르킨 대사는 회의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특사 파견에 대해 많은 회원국이 지지했다고 밝혀 반 총장이 남북긴장 상황에서 모종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음.

● 안보리, ‘한반도 긴장’ 긴급회의 소집(12/20)

-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19일 오전 11시5분(한국시각 20일 새벽 1시10분)에 개최됐음.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이에 맞선 한국군의 연평도 사격 훈련 계획, 그리고 북한의 보복 다짐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 회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공식 요청으로 소집됐음.
- 그러나 이날 회의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미국·영국·프랑스·일본과 중국·러시아 간 이견으로 인해 구체적 결론도



출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 유엔의 한 외교관은 회의 소집 직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을 살상한 북한의 행위가 긴장 고조의 원인이라는 서방 측의 시각과 한국군의 연평도 사격훈련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중.러간의 견해차가 쉽게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구체적 결론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하지만 러시아 측은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한국과 북한 양측에 대해 이 지역에서 상황을 추가로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도 피해야 하며, 최대한도로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 초안을 마련해 안보리 회원국들에 배포했음. 특히 초안에는 현 상황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남북 양측에 지체없이 특사를 파견토록 요청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음.
-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안보리 회원국이 아닌 한국과 북한 측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한국 대표부 관계자뿐 아니라, 북한 유엔 대표부 박덕훈 차석대사도 회의장 밖에서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긴장된 모습을 보였음.
-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박인국 유엔 대사는 미국, 일본 등 서방국 대사들과 잇단 양자 협의를 하고 ‘한국군의 연평도 포격 훈련은 자국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지극히 정당한 행위’이며, 북한이 먼저 공격적 행위를 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경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러’ 안보리 성명 초안, “남북 양측 최대한 자제”(12/20)**

- 러시아는 1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한반도 긴장 관련 의장성명 초안에서 “남북 양측이 최대한도로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회의 시작 전 연합뉴스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매우 위중하다”면서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긴장을 추가로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조치들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명은 또 “안보리 회원국들은 현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긴밀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모든 문제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남북 양측의 대화 재개를 아울러 촉구하고 있음. 이와 함께, 외교적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유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유엔 특사를 남북 양측에 조속히 파견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음.
- 그러나 러시아는 초안에서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북한의 무리농 농축이나,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
- 유엔의 한 관계자는 “이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비난과 경고를 담고 있지 않다”면서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해 이 초안이



그대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관계

● 한미, 내년초 미군기지 이전비용 협상 타결(12/23)

-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으로 이전시기와 소요비용에 관한 협상을 최종 타결할 계획임.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의 김기수 단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2006년 7월 사업단 창설 이래 지금까지 부지조성 공사와 환경오염 정화사업, 시설 설계와 공사 발주 준비 등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업기간과 비용은 내년 초에 합의될 것”이라고 밝혔음.
- 김 단장은 “우리측의 총소요 비용은 양측이 협상 중이어서 자세히 공개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반환기지 매각비용으로 이전비가 충당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음. 한국측이 부담하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총소요 비용은 건설비를 비롯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지원비 등 8조~9조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가운데 사업지원비 규모는 3조9천억원으로 6천억원 가량이 늘었음. 이는 사업지원비 차입에 따른 이자 4천900억원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세부적인 사업지원비는 평택시 지원 1조1천억원, 부지매입 7천억원, 기반시설사업 2천억원, 환경오염 정화사업 3천억원, 이주단지 조성 1천억원, 시설철거 2천500억원, 이사비 1천억원, 금융비용 및 관리비 1조원 등임.
- 이에 김 단장은 “총사업 비용은 그간의 사업환경, 공사 지연에 따른 다소의 비용 증가가 예상되지만 한·미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미측의 요구에 의한 우리측 부담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우리측 총소요 비용은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이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수준과 반환기지의 현재 지가 수준 정도라면 1조~2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김 단장은 이와 관련, “2004년 최초 사업계획 시에는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2007년 용산기지 전체가 국가공원화를 목표로 국토해양부에 무상관리 전환되었고, 반환부지 현재 용도의 지가로 평가할 때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그는 “국방부는 반환기지의 용도 변경 및 신탁개발 등 자산가치 향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연관된 44개 시·군의 요구 수준이 낮춰지지 않고 용도 변경 등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1조~2조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추남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총 사업규모는 226개 시설 56개 사업으로, 올해 말 기준으로 40개 사업이 완료됐음. 용산기지는 2016년 말까지, 동두천과 의정부의 미 2사단은 2016년 중으로 각각 평택으로 이전을 완료함.

● 백악관 “한국군 훈련은 방어적, 北 대응 안돼”(12/23)

- 미국 백악관은 22일 한국군의 합동화력 훈련은 방어적이며 사전에 충분히 발표된 것이라면서 북한이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음.
-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군의 훈련은 사전에 완전히 발표됐고 투명하며 방어적이라면서 “북한으로부터 결코 대응(response)을 낳아서는 안된다”고 말했음.

● 美도 긴박..합참의장 펜타곤서 심야 지휘(12/21)

- 미국은 한국 정부의 연평도 사격훈련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비상 대응 태세를 갖추고 훈련을 지켜봤음.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를 비롯한 미 정부의 한반도 라인들도 연평도 사격훈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음. 특히 미군의 실무 최고 지휘관인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은 19일(현지 시간) 밤늦게 국방부 지휘통제센터에 나와 연평도 훈련상황을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 CNN 방송은 20일 멀린 의장과 참모들이 연평도 훈련과 관련해 전날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 내에 마련된 군지휘센터(NMCC)에 나왔다고 전했다. 멀린 의장은 로버트 월러드 미 태평양사령관,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과 끊임없이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며 상황을 챙겼음.
- 국방부 관계자들은 멀린 의장이 이날 밤 국방부에 나온 것은 미군이 한반도의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음. 이 관계자들은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상시적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밤새도록 비상통신체제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 미국은 북한 군과 무기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정찰위성과 다른 정보자산들을 한반도 상공에 배치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하지만, 항공모함이나 전투기들은 훈련현장에 배치하지 않았음. 미군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드러나지 않게 행동하기를 원했다고 미군 관계자들이 전했다.
- 한편 CNN은 미국이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기 위해 지난주 위기대응팀(crisis team)을 꾸렸다고 군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현재 이 팀은 계속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나. 한·중 관계

● “한중 국방장관회담 내년 2월 베이징서 개최”(12/26)

- 김관진 국방장관과 중국의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이 내년 2월 중 베이징에서 만나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 지역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내년 2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1월 초에 국장급 실무진이 만나 회담의제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중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협의 중이었으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태와 이에 따른 국방장관의 교체로 일정이 다소 지연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회담 개최일자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한중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5월에 베이징에서 열린 것을 비롯해 양국의 수교 이후 서울과 베이징을 오가며 1~2년에 1번 정도 개최됐음. 이번에는 서울에서 개최할 차례이나 재차 베이징에서 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음.
-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국방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방안과 함께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불안해진 동북아 지역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주로 양국의 군사교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겠지만,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서도 지역정세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측은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한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청할 것으로 보임. 중국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접지역의 사격 훈련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군사훈련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음.

● <中서 韓해경함-어선 대치사진 ‘묘한’ 파장>(12/24)

- 중국 어선의 침몰 사건으로 불거진 한중 양국의 외교 갈등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중국 언론이 갑자기 중국 어선들과 한국 경비함이 대치하는 사진을 부각시키고 나서 묘한 파장이 일고 있음.
-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 등 중국의 언론들은 24일 중국 어선들이 서로 맞줄로 묶은 채 한국 해경함 2척과 대치하는 사진들을 보도했음. 한국 해경이 공중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서 나란히 늘어선 중국 어선 11척은 한국 해경함 2척에 둘러싸여 있음. 사진 속에는 한국 해경함에서 출동한 쾌속정이 중국 어선에 승선하기 위해 주변을 맴돌거나 해경함에서 중국 어선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는 장면도 담겨 있음.
- 한중 외교당국이 어선 전복사고를 원만히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교환했고 23일 중국 외교부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소통’을 강



조하면서 잠시 표출된 외교 갈등이 진정되는 듯한 국면에서 중국 언론들이 어선과 경비함의 대치 사진을 부각시키고 나선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함.

- 언뜻 보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실태를 알리고자 한 한국 해경의 사진 자료를 가져다 공개함으로써 중국 언론도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 실태를 인정한 게 아니냐고 볼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님. 실제 중국 농업부 산하 어정국은 23일 베이징에서 전국어업공작회의를 열고 민감한 서해 수역에서 자국 어선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성심을 다해 잘 해나가기로 결정하기도 했음.
-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앞서 자국 어선의 침몰 지점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인 잠정조치수역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며 한국에 책임자 처벌과 인적·물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고자세를 보인 것을 고려한다면 갑작스런 중국의 인식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임.
-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한중 양국의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이 중국에 여러 차례 유감을 전달해오면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해 어선 침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마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투의 언급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음.
- 중국 언론들은 한국 해경이 중국 선박들이 불법 어로를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하면서도 촬영 장소는 ‘황해(서해)상 한국에 가까운 쪽’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써 가며 사진 속 선박들이 한국 EEZ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음.
- 따라서 한국 해경이 공개한 대치 사진을 역으로 활용해 중국 어민들이 한국 해경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게 중국 언론의 실제 속셈일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중어선 전복’ 외교갈등 진정 기미(12/23)

-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전복사고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한·중 양국의 외교갈등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음. 한·중 양국은 23일 이번 사고가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데 인식 하에 서로 갈등을 자제하고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교환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 외교부 김영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공정한 조사결과에 바탕을 뒀 이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에서 중국측과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며 “양국은 협의과정에서 이 문제가 원만히 처리돼야 하며 양국간 우호관계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 대변인은 이어 “현재 여러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측과 협의 중이며 조업과 관련된 문제와 양국 우호관계 전반은 구분돼야 한다는데



공통인식을 갖고 있다”며 “일반 국민들의 감정적 반응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중국에 여러 차례 유감을 전달해오면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한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도 이날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별한 내용을 게재하지 않았음.
-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이날 주한 중국대사관측과 접촉을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측의 최종 조사결과를 중국측에 설명했으며 이번 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선원 시신의 운구와 현장에서 체포된 선원 3명의 신병처리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 정부가 나포 중인 5척의 중국 어선의 처리와 불법적 근절을 위한 근원적 대책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 中 “어선 침몰사건 韓과 소통중”(12/23)

- 중국의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중국 어선의 서해 침몰사건과 관련해 “한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중국에 여러 차례 유감을 전달해오면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아울러 북한의 포격도발 사건 한 달을 맞는 상황을 평가해달라고 하자 “현재 한반도 형세는 여전히 고도로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유관 각측이 절제를 유지하면서 책임있는 태도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을 해가기를 호소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음.
- 그러면서 “중국은 대화 재개를 위해 지금까지 각종 경로로 각 측과 접촉해왔다”며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간 긴급회의 제안을 각 측이 고려해 한반도 문제를 대화의 궤도로 올려놓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장 대변인은 한국군이 이날 대규모 군사훈련을 다시 실시한데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했음. 장 대변인은 한국이 잇단 군사훈련에 대해 방어적 훈련이라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군 훈련 장소를 찾아 격려한 게 중국의 제안에 반대되는 행동 아니냐는 질문에 “평화를 권하고 대화를 촉진하는(勸和促談)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우회적으로 답했음.
- 그는 아울러 “남북한은 자국민의 안위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차 “최대한도의 냉정을 유지하면서 책임있게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내년 1월 방미 계획과 관련해 장 대변인은 “후 주석의 방미는 신시대 중미관계의 중요 사건으로서 이번 방문을 통해 중미관계가 적극적인 협력과 발전을 추동해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음.



● 환구시보, 韓군사훈련 맹비난 눈길(12/23)

- 중국의 국제뉴스 전문지인 환구시보가 한국의 잇단 군사훈련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은 자제를 보인다고 두둔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음. 환구시보는 23일 1면 머리 기사를 통해 한국군이 군사분계선 아래의 경기도 포천과 동해상에서 다시 대규모 육·공군 군사훈련과 해상훈련을 평화시로서는 최대규모로 실시한다고 소개하고, 이는 마치 북한이 반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음.
- 이 신문은 지난 20일 한국의 서해 해상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이 반격할 가치가 없다고 반응해 전 세계가 안도했었는데 한국이 다시 군사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다시 걱정스러운 상황에 빠졌으며 세계가 놀라고 있다고 우려했음.
- 그러면서 한국은 결국 북한의 분노를 촉발하려는가라고 반문하고, 한국군의 군사행동은 이명박 정부의 안보 만족도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만족도가 높아질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이 신문은 아울러 중국내 한반도 전문가 20명을 상대로 한 22일 설문조사에서 5명이 한국군의 군사훈련으로 남북한 간에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12명은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했음. 또 세계 각국과 주요 언론매체들이 한국의 군사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 신문은 특히 ‘벼랑을 축구장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군의 군사훈련을 재차 비난했음. 사설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모욕을 받은 나라로 착각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한국이 미국과 더불어 여러차례 군사훈련을 강행해 북한에 얼마나 많은 모욕을 줬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중국도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는지 알기는 하는가”라고 되물었음.
- 이어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대국은 아니지만 미국, 중국, 일본이라는 대국 간 복잡한 관계로 인해 3국이 한국과 마찰이 생겼을 때 종종 양보를 하고 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사정 때문에 한국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가는지도 모르겠다”고 적었음. 사설은 아울러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선 더 강력한 수단으로 한국에 중국식의 해법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음.
- 이런 가운데 중국의 러위청(樂玉成) 외교부 정책기획국장은 이날 환구시보와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尖閣>열도) 중일 갈등과 한국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 아시아 정세가 복잡해져 중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수석대표간 긴급협의를 제의한데 대해 일부에서 이를 ‘외교적 쇼’라고 폄하하지만 이런 쇼는 한국의 군사훈련 쇼보다 훨씬 낫다”고 불편한 감정을 토로했음.
- 그는 이어 “무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화와 협상이 가장 좋



은 방법”이라면서 “중국의 외교에 대한 여러가지 평가가 있지만 중국 외교는 약하지도 강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 中, 韓 대규모 군사훈련에 우려(12/23)

- 한국이 23일 포천에서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국이 우려의 시선을 던지며 예의주시하고 있음.
-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 언론들은 20일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으로 인해 조성된 긴장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이 다시 북한과 가까운 곳에서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벌이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임.
- 중국청년보는 23일 ‘한국이 대형 군사훈련을 잇따라 벌여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북한을 향해 군사·정치적인 강경 기조를 지속함으로써 연평도 사격훈련 이후 한반도에서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음. 이 신문은 이번 훈련이 진행될 곳은 북한과 불과 20km 떨어진 포천시라고 강조하면서 한국 내 일부 언론들도 정부의 계속되는 대북 강경 기조를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북한이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때 보복 공격을 하지 않음으로써 겨우 긴장이 완화된 속에서 한국군이 다시 지상군, 공군 합동훈련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군사훈련의 규모가 역대 최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 진찬릉(金燦榮)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군사적인 자극을 계속하는 것은 북한이 자제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북한은 남한과 군사적 대치를 하는 대신 미국과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진 교수는 “그렇지만 미국이 북한에 반응을 해 주지 않는다면 남한의 반복된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인내심도 바닥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음.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 머리기사로 한국군의 군사훈련 소식을 전했다며 시나닷컴, 소후닷컴, 텅신 등 중국의 주요 포털사이트 인터넷 뉴스 코너에서도 한국군의 군사훈련 소식이 주요 소식으로 다뤄지고 있음.

● 중국선원 “경비함 우리가 들이받았다” 시인(12/23)

- 서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단속 중이던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침몰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중국 어선에 탔던 선원들이 경비함을 들이받은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음.
- 이는 한·중 외교 갈등으로까지 비화하는 이번 사태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어서 그동안 한국 측의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강경자세



를 보였던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23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중국 선원 3명을 상대로 불법조업과 충돌 당시의 정황을 조사한 결과, 선원들로부터 단속 중인 경비함을 랴오잉위(遼營漁.63t급)호가 들이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음. 당시 배에 탔던 기관장 주황(44.산둥성 영동시)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업 중인 우리 배로 한국 경비함이 다가오자 선장(이영도·사망)이 중국 측으로 달아나던 중 갑자기 뱃머리를 돌려 뒤따라 오던 경비함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했음.
- 이어 주황씨는 “당시 선미에서 해경의 정선 명령을 들었으며, 선장이 경비함의 추격을 방해하기 위해 배를 돌린 것 같다”고 증언했음. 현재 주황씨와 함께 군산해경에서 조사를 받는 나머지 2명의 중국 선원도 주황 씨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주황씨는 “당시 조업하던 곳이 중국측 영해인지, 한국측 영해인지 선원들은 전혀 몰랐다. 오직 선장만이 그곳이 어느 나라 해역인지 알았을 것”이라며 우리측 EEZ 침범여부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음. 선장은 지난 18일 사고 직후 헬기 편으로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음.
- 군산해경은 중국 선원 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거의 끝남에 따라 이번주내로 당시 현장에 있던 해경 대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임.
- 이에 앞서 군산해경 박세영 서장은 전날(22일) 중국어선 침몰 사건과 관련해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올바르게 법집행을 했다”고 밝혔음. 박 서장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부터 0.8마일 안쪽에서 정선 명령을 내린 것이 분명하다”며 “EEZ 내에서 해경으로부터 정선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지난 18일 군산시 옥도면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중국 랴오닝성 선적인 랴오잉위호가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전복돼 선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음. 당시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배에 오르려던 해경 경찰관 4명은 선원들이 휘두른 쇠 파이프와 각목 등에 맞아 부상했음.
-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한국은 전력을 다해 실종 선원 구조에 나서고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한국이 중국 선원들의 인명·재산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한·중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음.

● <‘중어선 전복’ 한·중 마찰로 번지나>(12/22)

- 최근 서해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의 전복사고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 지난 18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북서방 72마일(116km) 해상에서 중국어선 요영호(63t급)가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경비함을 들이



- 받아 전복되면서 선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중국 정부가 한국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논쟁이 전개됐음.
- 특히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북한의 도발을 놓고 중국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인 뒤 양국 관계에 다소 불편함이 조성된 상황에서 또다른 악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은 전력을 다해 실종 선원 구조에 나서고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한국이 중국 선원들의 인명·재산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해경의 단속은 정당한데 중국이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며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
 -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중국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 정부와 합동조사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핵심쟁점은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EEZ)가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에서 해경의 단속 수위가 적절했느냐는 문제로 모아짐.
 -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해경은 한국 측 EEZ 내 15해리 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던 15척 가량으로 이뤄진 중국 선단에 정선명령을 내렸지만 중국 어선들은 이를 무시하고 ‘잠정조치수역’으로 도주했음.
 - 이후 해경은 ‘잠정조치수역’에서 요영호와 같은 회사 소속으로 추정되는 어선에 승선해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선원들이 극렬히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해경의 검색작업을 방해하던 요영호가 경비함의 측면을 들이받고 전복됐음.
 - 이와 관련해 장위 대변인은 “한중 양국의 어업협정에 따르면 양국 어선은 모두 이 (사고) 해역에 들어갈 수 있고 양국은 자국 어선에 대한 법 집행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잠정조치수역’에서는 한중 양국 모두 자국 어선에 대해서만 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임.
 - 반면 한국은 해경이 EEZ 내에서 정선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는 중국 어선을 ‘잠정조치수역’까지 추적한 것은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외교부 당국자는 “요영호는 해경 경비함에 직접 부딪혀서 전복한 것이지, 우리 경찰이 물리력을 가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 EEZ는 보통 200해리(370km)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을 비롯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UN) 해양법상의 개념으로 타국 어선이 이 해역에서 조업하려면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001년 6월30일 발효된 한중어업협정에도 양국은 상대국 EEZ에서 조업할 수 있지만 상대국이 입어허가증을 발급한 국민 및 어선만 해당한다고 규정돼 있음. 전복된 요영호의 경우 한국 정부로부터 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영사사건으로 규정하고 자칫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차분한 대응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외



교부 당국자는 “해경이 지난 20일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현장을 담은 비디오와 레이더 사진, 중국 선원들의 진술을 모두 보여줬다”며 “중국은 ‘잠정조치수역’에서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그 이상의 얘기는 없었고 체포된 선원들에 대해 강압적인 수사를 안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이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한국과 중국 양국에 바람직하지 않고 한중간 협력사업이 와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통보해온 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중국 대변인이 인명피해에 대한 여론 등 국내 정치를 고려해 반발했던 것 같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음.
-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중국의 태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자칫 양국간 외교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됨. 한편 해경은 중국 어선의 전복과 관련한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부 “중어선 전복사고, 정당절차 따라 처리”(12/22)

-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1일 중국 정부가 서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의 전복사고와 관련해 한국의 책임을 주장한데 대해 “양국 정부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양측간 긴밀한 협의와 협조 하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당국자는 “현재 객관적 사실 확인작업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양국은 이번 사건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데에 공통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지난 18일 낮 12시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50여척 중 요영호(63t급)가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 경비함(3천t급)을 들이받고 침몰해 중국인 선원 1명이 실종되고 1명이 숨졌으며 8명이 구조됐음. 단속을 위해 어선에 오르려던 우리측 해양경찰 4명은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팔 골절상 등을 당했음.
- 외교부는 사고직후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에게 전화를 걸어 유감을 표명하고 “사후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 中, 서해 어선침몰 한국책임 주장(12/21)

- 서해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 경비함과 충돌해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한국의 책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은 전력을 다해 실종 선원 구조에 나서고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장 대변인은 한국이 중국 선원들의 인명·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한편 철저한 조치를 취해 앞으로 유사 사건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이 사건을 엄중히 여기고 있으며 이미 엄정한 태도로



한국 정부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아울러 장 대변인은 “어떤 해역에서든 어선에 충돌해 인명 피해를 내는 것은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중국 어선이 한국 경비함을 들이받았다는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와 반대 주장을 폈음.
- 그는 “한중 양국의 어업협정에 따르면 양국 어선은 모두 이 (사고) 해역에 들어갈 수 있고 양국은 각자 자국 어선에 대한 법 집행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사고 어선의 불법 조업 사실도 부인했음.
- 장 대변인은 “만약 불법 행위가 있더라도 상대국에 통보를 해야 하며 상대방 어선에 승선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 中외교부, 남북에 ‘최대 자제’ 호소(12/21)

- 중국 외교부가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후 유관국이 최대한 자제를 유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1일 보도했음.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한국군의 연평도 훈련강행에 북한이 대응하지 않은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중국은 유관국이 최대한 자제를 유지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사태의 악화를 피해달라고 호소한다”고 답했음.
- 장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 사태의 최근 전개를 주의깊게 보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뿐더러 기타 유관 각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매주 화, 목요일에 정례브리핑을 실시하며 필요시 기자의 질문에 대변인이 답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표명함.
- 아울러 중국의 왕민(王民) 유엔 차석대사도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중국은 남북한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면서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 왕 차석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한반도 긴급회의 종료 후 “중국과 미국, 러시아를 포함해 안보리 회원국들이 한반도의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긴급회의는 긍정적이고 매우 중요했다”고 언급했음.

● 中추이첸카이 “누구도 갈등 부추길 권리가 없어”(12/20)

- 추이첸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0일 한국군의 연평도 사격훈련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누구도 갈등과 전쟁을 부추길 권리가 없다”고 밝혔음. AFP통신에 따르면 추이 부부장은 이날 인권 문제와 관련해 호주 관리들과 만난 직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누구도 한반도 남북한 주민들이 피를 흘리게 할 권리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음.
- 이는 한국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이 종료된 이후 공식적으로 처음 나온 중국 외교 당국자의 발언임. 다만 추이 부부장은 남한이나 북한의 국가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음.



- 추이 부부장은 중국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왔다면서 이는 중국이 오랜 기간 달성하고자 노력해온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몇달간 중국이 한반도 문제 당사국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어떤 견해차가 있더라도 갈등과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中외교부장 “한반도 평화 위해 노력”(12/20)

-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2010년 자국 외교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중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격화된 한반도 정세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홈페이지에 양 부장이 연말을 맞아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게재했음.
- 양 부장은 인터뷰에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교전이 초래한 정세 악화에 대응해 우리는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전개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권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 대만 무기 수출 문제에서 남중국해 분쟁에 이르기까지 올해 순탄치만은 않았던 미중관계와 관련해 양 부장은 “중미관계는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발전해왔다”고 자평했음.
- 양 부장은 그러면서 “중미는 한반도 정세, 이란 핵,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왔다”며 “중미관계에 일부 모순과 갈등 요소가 있지만 우리는 미국이 상호존중의 정신에 입각해 이 문제들을 처리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그는 일본과의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분쟁에 대해서는 “우리 어민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에 대해 결연한 투쟁을 벌임으로써 국가주권을 수호했다”고 언급했음. 이 밖에도 양 부장은 올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심화됐다고 자평하는 한편 유럽과의 관계도 비약적으로 향상됐다고 말했다.
- 한편 양 부장은 안정적 발전 속에서 경제시스템을 전환한다는 중국의 경제 발전 노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촉진하는 외교활동을 전개해나간다고 강조했다.

● 中, 안보리서 사격 훈련 재차 반대(12/20)

- 중국이 20일(한국 시각)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남북한에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면서 한국군의 연평도 사격훈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음. 2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민(王民) 유엔 상주 부대표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중국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행위에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 왕 대표는 한반도에서 다시 유혈충돌이 빚어진다면 남·북한 국민에게 우선 재앙을 몰고와 동족상잔의 비극이 재연됨은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쳐 화가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 왕 대표는 지난 18일 중국 외교부의 장즈쥘(張志軍) 상무부부장이 발표한 ‘한반도 정세에 관한 성명’을 그대로 되풀이해 강조했다. 장 부부장은 이 성명에서 긴장을 격화시키는 대신 완화시켜야 하며, 대결 대신 대화를, 전쟁 대신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남북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강렬한 바람이자 호소라고 밝혔다.

● <中언론, 韓 훈련강행에 우려 표시>(12/20)

- 중국이 한국군의 연평도 해상사격 훈련계획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거듭 자제를 촉구하고 있음. 중국 언론매체들은 20일 한국군이 결국 해상사격훈련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북한의 대응이 예상돼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면서 우려감을 표시했음.
-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반도 긴급회의가 열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한에 자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한국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이 실시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냉정을 강조했다.
-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인터넷사이트인 인민망을 통해 유엔 안보리 개최 소식을 자세히 전하면서 남북한의 냉정과 자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관영 신화통신도 안보리의 한반도 긴급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한국군의 실탄사격 훈련이 20일 실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영 CCTV도 한국합동참모본부가 훈련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매시간 뉴스로 전하고 있음.
- 중국 매체들은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은 ‘남북한 간 교전’으로, 한국군이 연평도 부근에서 실시한 사격훈련에 북한군이 대응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한국군이 다시 해상 실탄사격훈련을 개시하면 북한의 대응 사격을 부를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러시아의 제의로 유엔 안보리에서 한반도 긴급회의가 개최된 상황에서 실탄사격훈련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초래되면 남북한 모두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
- 앞서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은 원자바오 총리를 수행해 파키스탄을 방문 중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공동으로 남북한에 냉정과 자제를 촉구했음.
- 중국 외교부의 장즈쥘(張志軍) 상무부부장은 18일 성명을 내고 “중국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행위에도 결연히 반대한다”며 한국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특히 유엔 안보리의 한반도 긴급회의 개최를 계기로 주중 남북한 대사를 수시로 불러 양측 모두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 한·일 관계

● “日, 한반도 유사시 한국 라디오와 협력”(12/26)

-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대북 라디오방송과 협력해 북한에 있는 일본인 납치피해자들에게 집합장소 등을 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26일 이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납치피해자들에 대한 연락 수단으로 대북 방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라디오 방송국에 협력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납치문제대책본부가 일본으로부터 방송하고 있는 대북 단파 라디오방송 및 실종자 문제조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대북 단파방송도 활용할 예정임. 일본은 북한에 있는 납치피해자들이 라디오를 갖고 있지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라디오가 북한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도 모색할 예정임.

● 日, 연평도 관련 정보수집 분주(12/20)

- 한국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 훈련을 앞두고 일본 열도의 눈과 귀도 한반도로 집중됐음.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20일 오전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에게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철저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등 빈틈없이 대응하라고 지시했음.
- 간 총리는 19일 밤에도 총리관저로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외무성과 방위성 핵심 간부들을 불러 한반도 정세에 관한 보고를 받고 “여러가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만전의 태세로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음.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각 부처별로 한국군의 훈련 상황과 북한의 동향, 주변 각국의 반응 등을 시시각각으로 확인하며 민감하게 반응했음.
-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자신의 판단으로 군사훈련을 할 권리가 있다.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를 강하게 희망한다”며 “(일본은) 한국이나 미국, 그 밖의 관계국과 긴밀하게 연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신문은 이날 조간에 한국군의 훈련 계획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움직임 등을 1면 주요 기사로 전했고, 교도



통신 등은 20일 오전부터 각국의 특파원을 통해 한국과 주변 각국의 움직임을 잇달아 속보로 타전했음.

라. 미·중 관계

● 후진타오, 내년 1월19일 美 국민방문(12/23)

- 미국 백악관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1월 19일 미국을 국민방문한다고 22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이전에 후 주석의 1월 방문 사실을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날짜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후 주석의 방미는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인도, 멕시코에 이어 외국 지도자의 세 번째 미국 국민방문임.
- 후 주석의 방미는 양국이 한반도 긴장, 위안화 환율,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의 사안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양국 정상간 만남을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지가 매우 주목됨.
- 백악관은 이날 발표에서 일단 양국간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애썼음. 백악관은 성명에서 “후 주석의 방문은 미국과 중국 양국 국민 사이의 친선뿐 아니라 양국간 및 지역적 및 세계적 사안과 관련해 양국간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밝혔음.
-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동반자 관계를 계속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이해관계를 진전시키고 공유한 관심사를 다루기 위해 워싱턴에 오는 후 주석을 환영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1월 19일 자신이 직접 주재하는 국민만찬을 통해 후 주석을 맞이하게 됨.
- 이번 만남에서 논의될 주요 사안 중 하나는 위안화 환율 문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후 주석을 만나 위안화 환율 시정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음.
- 톰 도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후 주석 방미 이전에 환율 문제에 대해 진전을 보이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중국이 이와 관련해 방미 전까지 ‘성의 표시’를 할 지가 관심사임.
- 또 후 주석 방미 직전인 오는 1월 9~12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점도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음. 게이츠 장관의 중국 방문은 미 행정부의 적극 추진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게이츠 장관은 군부와 만나 최근의 남북간 긴장 문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해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게이츠 장관이 양국 군이 협력 가능한 영역을 확장시키고, 상호 이해를 늘리며 “오판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바마, 中에 “北 통제 못하면 달리 생각있다”(12/22)**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이달 5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에서 “북한에 대해 확실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생각이 있다”며 강하게 압박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했음.
- 이 신문은 복수의 외교소식통 말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 전화 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을 방임하는 바람에 이런 사태(연평도 포격)가 일어났다”고 지적한 뒤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이 제대로 북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의 ‘생각’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없었으나 외교소식통은 내년 1월로 예정된 후 주석의 방미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고 보도했음. 중국은 오바마 정권 출범이후 후 주석의 첫 미국 방문이 ‘양국 관계에 의미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매우 중시하고 있음.
-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불만 표시가 있는 뒤 중국은 다이빙귀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북한에 파견해 이달 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으며 당시 상당히 강하게 북한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 신문은 “오바마 정권이 지난 3월 천안함 침몰 당시 중국을 배려해 서해 한미 합동훈련에 항공모함 파견을 유보했으나 연평도 포격사태 후에는 방침을 바꿔 서해 훈련에 원자력 항모 조지워싱턴호를 파견해 ‘북한의 도발을 용인할 경우 중국 주변에서 군사 시위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냈다”고 보도했음.

마. 중·일 관계

● **日 “한국 EEZ 내 中 어선 난폭행위 규제해야”(12/20)**

- 중국 어선이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전복된 사건과 관련해 일본이 중국에 견제구를 던졌음.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 어선 전복 사건과 관련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난폭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국측이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센고쿠 장관은 또 “올해 들어서도 중국 어선이 한국의 EEZ 안에 대거 들어가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며 “중국측은 불법 조업이 없도록 제대로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日 ‘센카쿠 비디오’ 유출 관련자 다수 징계키로(12/20)**

- 일본 정부가 이른바 ‘센카쿠 비디오’를 인터넷에 유포한 해상보안청 직원과 상급자를 다수 징계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20일 보도했음.



-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 9월7일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부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에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어기고 인터넷에 올린 주임 항해사(43)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 정보 관리 문제나 감독 책임을 물어 상급자들도 징계하기로 했다. 스즈키 히사야스(鈴木久泰) 해상보안청 장관의 문책 여부도 논의중임. 산케이신문은 처분 대상자가 50명 이상에 이를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 한편 도쿄 경시청은 20일 국가공무원법 위반(기밀 엄수 의무 위반) 혐의로 해상보안청 주임 항해사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